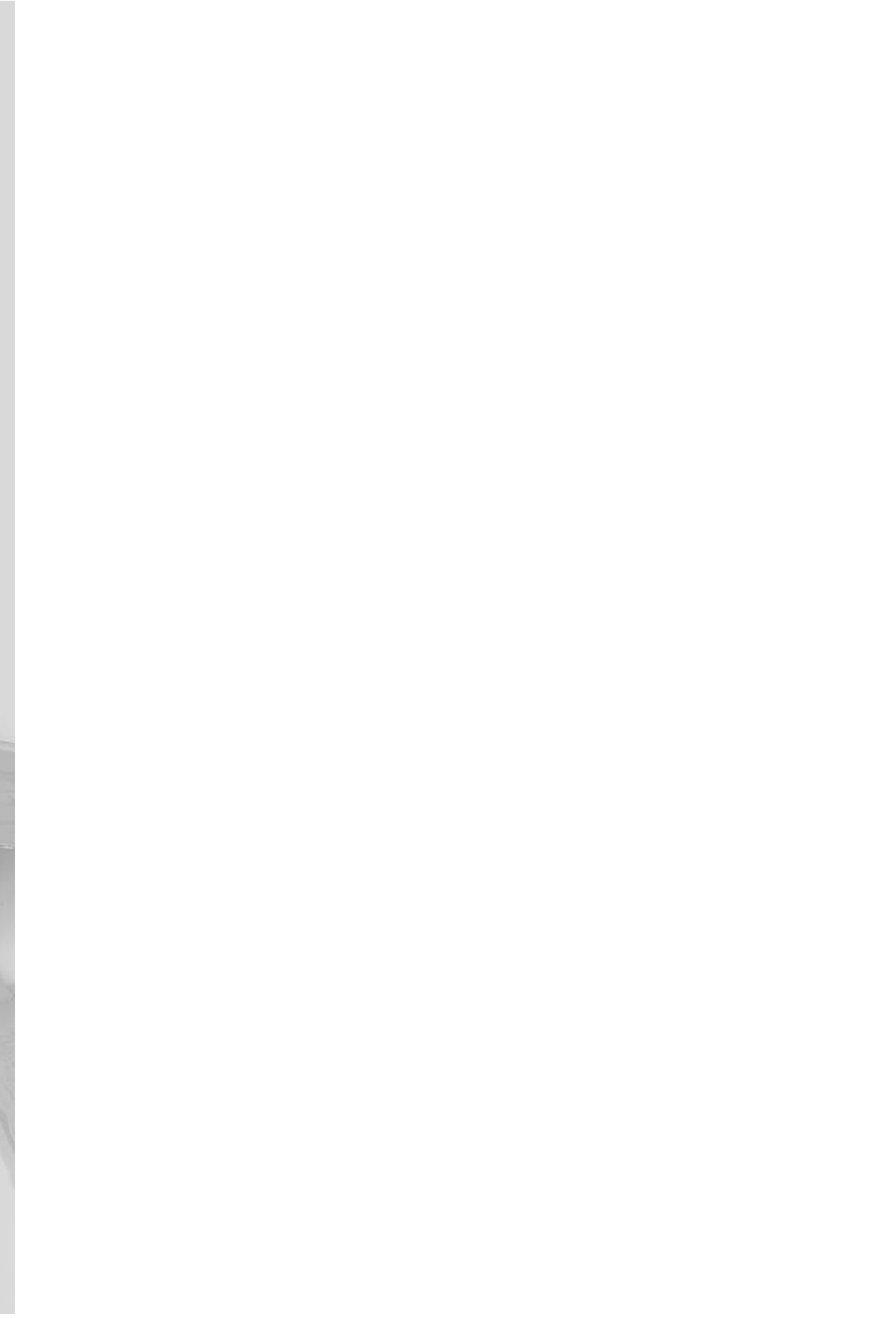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



머리말 ...

우 리 교육원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아 그 역량을 결집시키는 국민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교육총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지 난 반세기 동안 적대와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해 다소간의 견해차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10 번째로 발간하는 총서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는 이러한 우리 사회내의 여론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후 남북 주민 간의 민족동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독일에서 통일 전후 겪게 된 여러 가지 갈등사례를 통한 교훈, 남북통합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남북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한 제언 등을 다루었습니다.

통 일교육총서는 앞으로도 관계 전문가들의 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을 담아 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각계의 제언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총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2004년 8월

통일교육원장 **박성호**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9 |
| II.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조화 | 17 |
| 1. 서론 | 19 |
| 2. 갈등문제와 관련한 남한 통일교육의 성과와 한계 | 28 |
| (1) 정치와 시민교육 | 28 |
| (2) 정치교육의 역사 | 32 |
| (3) 통일교육의 역사 | 36 |
| 3. 갈등문제와 관련한 북한 통일교육의 실태와 한계 | 44 |
| (1)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 44 |
| (2) 북한의 통일교육 | 49 |
| 4. 화해와 조화의 원천 : 민주시민교육 | 53 |
| (1) 평화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모색 | 53 |
| (2)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통일교육 | 57 |
| (3) 시민결사체를 통한 통일교육 모색 | 62 |
| (4) 독일 통일교육의 사례 | 65 |
| 5. 결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발전 모색 | 71 |
| 참고문헌 | 76 |

| | |
|--------------------------------------|-----|
| III.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갈등 과 해소방안 :————— | 79 |
| 통일 前後의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
| 1. 서론 | 81 |
| 2. 통일전 편견과 선입견의 형성과정 | 84 |
| (1) 통일전 동독의 정치교육 | 84 |
| (2) 통일전 서독의 정치교육 | 87 |
| 3. 통일전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갈등 | 91 |
| (1) 서독 내부의 갈등 | 91 |
| (2) 동서독간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서독 내부의 갈등 | 96 |
| (3) 대동독정책과 대동독교육 사이의 괴리 | 102 |
| 4. 통일후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갈등 | 109 |
| 5. 통일후 정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 | 115 |
| 6. 결론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교훈 | 119 |
| (1) 북한교육을 통한 편견과 선입견의 형성과정 | 119 |
| (2)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남남갈등 | 122 |
| 참고문헌 | 134 |

목 차 ...

| | |
|---------------------------------------|-----|
| IV. 남북 통합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 141 |
| 1. 서론 : 분단 민족국가의 통합문제 | 143 |
| 2. 정치통합과 공동체의식 | 151 |
| (1) 정치통합론 | 151 |
| (2) 공동체주의 | 153 |
| (3) 정치통합과 공동체의식 | 156 |
| 3. 남북한 공동체의식 비교 :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 160 |
| (1) 반공적 민족주의 對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 160 |
| (2) 열린 민족주의 對 조선민족제일주의 | 165 |
| (3) 다원주의 對 수령절대주의 | 173 |
| 4. 결론 : 남북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 | 181 |
| (1) 민족의식의 동일성 | 182 |
| (2) 국가의식의 차이 인정과 포용 | 184 |
| (3) 참여와 책임 | 186 |
| 참고문헌 | 192 |

표 · 그림 목차 ...

■ 표 목차

- 〈표-1〉 신동방정책과 관련한 서독 내부의 갈등 / 92
- 〈표-2〉 동독이 취한 차단정책의 유형들 / 97
- 〈표-3〉 동서독 교류를 통하여 동독이 취했던 경제적 이익 / 99
- 〈표-4〉 반미 감정의 유형 / 127

I. 들어가며.....

통일교육총서 10

같등을 넘어 통일포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한의 조기붕괴 혹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연구가 유행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조기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통일은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 경제력의 70%에 육박하는 20-30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가정 속에서 통일이 당연사안이 아닌 만큼 통일교육이라는 용어조차 불필요한 것처럼 인식해왔다. 때문에 통일교육 대신 민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관 및 이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견해는 이처럼 극과 극의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통일교육도 균형 잡힌 통일관 속에서 내실있게 실시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중·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정치사상교육기관으로서의 통일교육원이 통일과 더불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확대·개편되어 독자적인 기구, 예컨대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와 같은 기구로 거듭날 경우 향후 통일과정에서 차지하는 통일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독일의 경우 통일되기 전부터 통일 및 분단문제를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서 정치교육이 독일식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사회통합의 기초를 닦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물론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하고 또 어떤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신중해야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소화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이다. 통일되고 나서도 내독성(內獨省)은 해체되고 없어졌지만, 독일의 정치교육센터는 오히려 그 업무가 확장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 점은 전환기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원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주제와 범위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통일교육원이 추진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내적·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며 자기 변신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일교육원에 속한 인원으로 이런 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주어진 가용자원으로 점진적이거나 전환을 시도하며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를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 후에는 남북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크게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통일된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즉 통일된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통합이라는 문제는 통일 이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되기 전인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니 통일 전과 통일 후의 사회통합 문제는 상호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통일 이전의 사회통합 수준과 시민들의 의식 상태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사회를 보면 많은 이익단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마다 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대한 압력행사를 당연시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가 분열된 양상으로 나타나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즉 어떤 하나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를 때마다 그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경제인 그리고 시민단체 및 그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주민들과 이익단체들 사이에서 제각각 달라서 균형점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민주사회에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안 하나 하나 때문에 마치 사회 전체가 분열되고 표류하는 듯한 정도로 갈등이 갈등 그 자체로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갈등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지, 시작도 갈등이고 끝도 갈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향후 통일문제가 현안이 되었을 때도 재개되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 앞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통일교육원이 통일 전에라도 사회

통합문제에 주목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다. 그러기에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정책추진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는 가치관 부재의 상태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회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표출한 사건으로 지하철에서 화재를 일으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열차 안에서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한다. 또한 현재 남한 사회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26명이라는 사실들은 가치관의 실종을 명백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교육원은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좌표를 수립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면서 가치관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통일교육의 다원화를 모색하여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만큼, 현재의 문제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남남갈등 및 남북갈등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민주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여 의견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도 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대북문제를 진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개인 없이 공동체가 존재하지 못 하고 또한 공동체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공동체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열로만 치닫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며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개인주의의 심화를 초래하여 공동체의식이 실종되는 가운데 사회통합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통합과정에서 구심점이 되어 통일을 향한 민족적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진은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 하에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작은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조화’ 편에서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공과(功過)를 통해 통일교육이 담당해야 할 바람직한 주제와 범위의 외연을 찾고, 나아가 통일교육원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이정표를 모색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갈등 및 그 해소방안’ 편에서는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도출 및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함의를 독일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통합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북통합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을 담고자 한다.

II.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조화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서론

2. 갈등문제와 관련한 남한 통일교육의 성과와 한계

3. 갈등문제와 관련한 북한 통일교육의 실태와 한계

4. 화해와 조화의 원천 : 민주시민교육

5. 결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발전 모색

통일교육총서 10

갈등을 넘어 통일포

1. 서론

1987년 민주화로의 이행이 시작된 이후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정치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리의 정치가 의회의 정치로 바뀌며,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게 된다. 이러한 공고화의 과정은 민주적 정치문화가 안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특별히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시민교육분야라고 할 수 있다.¹⁾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행동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교육을 통해 형성되지 않고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은 그 의미를 제대로 지닐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성(citizenship), 즉 시민적 품성을 지닌 주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이 없이는 양적이고 외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은, 지향해야 할 목표도 없이 정치공동체를 표류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과제이외에도 한국사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민족통일의 문제이

1)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정치교육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용민,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정치교육”; 이정희·김웅진 외, 『민주주의의 확산』(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다.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미래의 새로운 정치체제에 적응시키고 대비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어느 정도 고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관심은 실천적 영역까지 확산되어 있지는 못 하였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나 관심 또한 저조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통일의식을 확산시키고 일상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통일교육 혹은 통일대비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 있다. 박용헌은 통일교육을 비단 통일과정에 필요한 통일의지와 태도 등 정신자세의 육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은 물론 통일한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국민적 자질육성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본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만길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운데 통일교육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내용이 통일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교육은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²⁾

필자는 통일이 된다면 통일대비교육은 없어지고 민주시민교육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절대적 독자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이란 커다란 틀 안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어디까지나 성숙한 시민사회에 부합

하는 방향, 즉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 기존의 체제 수호적이고 소극적인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신념과 역량을 배양하는 체제 확산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한시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지만, 이 한시성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남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듯이, 압축된 민주화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통일이후 특히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민주시민교육은 압축된 민주화의 과정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이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통일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되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개인적·과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

2) 이현근, “초·중등생 통일의식 변화 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홍보·교류협력·기타』(통일부, 2000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pp.76-77.
 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는 허영식은, 통일교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통일완성을 추구해야 할 평화교육, 남북한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교육,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다루어야 할 환경교육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념적·체제적 분단과 대립의 결과 나타난 이질화현상을 극복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에 기여해야 할 간문화학습의 차원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서울: 원미사, 2003), p.258

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는 이념"을 말하며, "민족공동체는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 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를 말하며, 건전한 안보관이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안보관을 말한다.

이러한 통일교육관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포괄적, 다원적, 관용적 가치가 아니라 현재 남한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방적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협의로 해석될 경우, 이는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북한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의식만을 강조하는 통일교육관은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정서적 민족주의가 유난히도 강력한 나라로 비치는 한국에서 혈연에 토대를 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폐쇄적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흘러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사이에 긍정적인 동질성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질성도 커졌다. 이런 이질성들을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족공동체의식을 내세워 선불리 '동질성'으로 묶어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

통일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 전향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체제 애호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치

중심적인 용어보다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인권·복지사회 실현’과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보여진다. 서독의 사례는 비평화나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는 ‘민주주의의 일상화’임을 잘 입증하고 있다.⁴⁾

다음으로 통일교육은 보다 개방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 역사적 동일성, 혈통적 동일성, 타민족과의 차별성에 의존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조해온 민족교육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의 가치관, 사고, 태도, 기술을 함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통일교육은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민족주의 이후의 단계도 고려하는 다문화주의적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⁵⁾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적 동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화로 인해 한국인의 범주에 새롭게 편입되는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편견적 사고, 태도, 행동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⁶⁾

최근 들어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포용정책으로 표현되는 남북한 화해협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남한체제의 우월성과 안보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남한 중심의 통일 지향방식에서부터, 남북한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3)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원, 2002), p.176

4) 위의 책, p.177

5) 다문화주의는 인종, 계급, 성,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성 등에 있어서 현저한 문화적 차이를 갖고 다양성을 지니는 사회집단을 정치적 차별 없이 포용하고 관용할 것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다문화주의는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분적·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각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타문화와의 타협, 공존의 기반으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평화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다문화주의가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6)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인간사랑, 2004), pp.138-139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의 통일교육은 체제우위의 접근방향에서 평화공존의 접근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⁷⁾

과거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만을 강조한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광복이후 통일교육의 명칭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 동안 통일관련 교육은 대내외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시기’, ‘통일·안보교육시기’, ‘통일교육시기’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 적극적인 통일대비교육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남북대화시대에 알맞게 종래의 반공교육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⁸⁾

평화공존시대의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민족의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통일정책에 관해서 나타난 남남간의 갈등, 권력정치에서 나타난 지역간의 갈등, 산업정책에서 나타난 계급간의 갈등,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난 계층간의 갈등 등에 휩싸인 남한 내부의 긴장감을 고려할 때, 50여년 이상 분단이 지속된 가운데 공산주의적 삶을 살아온 북한주민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민족의 통일문제이다.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어떻게 정서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민족적 정체성이 생기려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통일대비교육이 있다면,

우리는 통일을 의연하게 맞을 수 있으며 통일이후의 새로운 민족통합과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상황에서 남북한은 각각 이질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통일은 이러한 이질적 정체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이질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이질성을 극복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흔히 남북간의 이질성은 정치, 제도, 이념적인 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독일통일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더욱 중요한 이질성은 주민의 마음이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통일이란 제도적 이질성의 극복뿐만 아니라 의식의 통합, 마음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이 개인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문제로 귀착된다면,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민주·복지·인간의 존엄성 등이 보장안 되는 통일국가는 생각할 수 없다. 민주적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간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에서의 통일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북한에서의 통일교육도 필요하다.

7) 한민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20-21

8) 한민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39

쌍방의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같을 때만이 평화롭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더욱 민주적이며 개방적이며 관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교육이 변화를 거부하고 북한주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남한의 통일대비교육은 일방적인 짝사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교육교양, 지주·자본가계급·착취제도에 대한 증오심 고취, 노동 애호정신 고취,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교육교양, 집단주의 사상 교육교양, 교원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주요내용으로 주입한다. 북한교육이 주체사상과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중심으로 사상 교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북한의 통일교육은 그만큼 폐쇄적이며 투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간의 통일교육이 공통의 지향점 없이 병렬적으로 진행된다면, 남한의 통일교육은 아무리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효과에 있어 한계점을 노정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통일대비교육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이 예상치 못한 가운데 독일국민에게 다가온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가 말했듯이 ‘운’(fortuna)은 우리 한민족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비르투’(virtu)를 갖추고 있다면 그 운을 우리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군주가 교육을 통해 비르투를 갖추어야 했듯이 민족통일의 역사적 주역이 될 한국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비르투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비르투는 ‘시민적 덕’(civic virtue)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

다.⁹⁾ 물론 시민적 덕이 통일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적 덕을 갖추므로 인해 역사에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9)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태리의 통일을 위해서 비르투와 자신의 군대를 갖춘 군주가 등장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시대에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물론 기대할 수는 없다. 대신 시민 각자가 통일을 대비하고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을 지녀야 할 것이다.

2. 갈등문제와 관련한 남한 통일교육의 성과와 한계

(1) 정치와 시민교육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치와 교육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논하고 있다. 하나의 정치체제는 그 체제에 맞는 인간을 교육시키며, 또한 시민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치체제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¹⁰⁾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의 정치이론은 결국 어떻게 좋은 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이론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와 교육의 일체성’에 관한 플라톤적 전통은 근대에 들어서 로크와 루소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특히 루소는 시민들의 성격은 정부의 성격(다시 말해 체제와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정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았고, 사람들의 성격은 그들이 속한 정부의 성격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왔다.”¹¹⁾

정치와 동등한 지위를 누렸던 교육은 행태주의 정치학의 등장과 더불어 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적극적인 개념으로부터, 주어진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학습훈련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그 위상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은 정치문화의 범주 속에서 다루어지는 협소한 개념

으로 전락되었다.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교육은 정치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나타나며,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정치사회화란 정치적 의식성향, 정치적 참여능력, 정치적 현상에 대한 태도 등 정치적 행동특성과 행위양식을 교육을 통하여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에 의하여 무의도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정치교육은 정치적 의식, 태도, 행동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학습시켜서 정치체제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비판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 태도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다. 정치교육을 좁은 개념으로 쓴다면 정치사회화의 하위 개념으로 나타나지만, 정치와 교육을 동일시했던 고대적 전통을 따른다면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해온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교육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미에서 기존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교육을 활용하였는데, 정치교육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정치체제를 명확히

10) 플라톤은 『국가』의 8, 9 권에서 철인왕정, 명예정, 과두정, 민주정, 참주정 등의 정치체제에 따라서 인간성의 모습의 달라지고 있음을 그리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인간성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체제가 달리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제가 먼저나 인간성이 먼저나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하는 문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영혼을 인간의 영혼과 동일시하는 플라톤에 있어서 체제와 인간성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난다.

11) Jean-Jacques Rousseau, *The Confessions*, translated by J. M. Cohen (London: Penguin Classics, 1953), p.377

이해하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일찍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생활이나 문화에 녹아 스며들어 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교육은 필요 없었다. 민주주의의 전통이 자리잡힌 가운데, 그 전통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시민의 관습이나 규범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교육의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서도 정치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¹²⁾

현대사회에 있어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 또는 정치적 학습이라는 개념에 비해 개인보다는 체제중심적이며, 체제의 변화와 발전보다는 안정과 존속이라는 보수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정치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치이념을 주입시키고 훈련하는 의미로 흔히 이해되어 왔다. 민주화로 이행되기 전의 단계인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 하에서 정치교육은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주입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일찌감치 발달하기 시작했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교육은 체제유지는 물론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교육은 정치에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며, 정치와 교육의 일체성이 복원되게 된다.¹³⁾ 플라톤과 루소가 말하고 있는 '시민형성의 기술로서의 교육', 정치에 버금가는 '예술로서의 교육'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사회에서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교육은 정치행위자들에게 민주적 가치를 학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치교육은 올바른 시민성을 함양시키는데, 이러한 시민성이 없이는 시민사회에 신뢰와 협동이 뿌리내릴 수 없고, 체제의 정당성을 판단할 근

거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 교육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정치사회화보다도 포괄적이다. 정치사회화가 정치문화로의 단순한 인입 과정(引入過程)이라면, 정치교육은 한 사회의 정치적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규범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은 정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성공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체제의 구조, 기능 그리고 정치체제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발휘하게 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정향이나 태도, 즉 정치문화를 일정한 틀 안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민주적 정치발전의 기능을 담당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치운영 및 행위의 후진성을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체제 내에서 자신의 위치, 즉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와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정

12) 홍득표, "서양 정치교육의 체제와 내용: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정치학회 17차 서울 세계대회 동시 학술대회 논문집 -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1997)

13)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는 정치와 교육의 일체성에 관한 이론 외에도, '상대적 우위론' 과 정치와 교육의 '분리론' 등이 존재한다. 상대적 우위론은 정치가 교육보다 우선한다는 입장과, 교육이 정치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분리론은 정치와 교육은 각각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득표, 위의 글, p.3

치적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해 준다.¹⁴⁾

시민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주체는 단지 학교만이 아니다. 시민결사체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들을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시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적 제도 및 과정, 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교육을 하며, 시민의 선택능력과 판단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원적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관용과 화해, 절제, 타협을 선호하게 하며, 반대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¹⁵⁾ 시민사회의 새로운 형성은 시민교육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정치교육의 역사

한국에서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교육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으로서 미국식 민주시민교육을 수용하고 변용한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정부수립 이후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홍익인간 사상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교육이념을 접목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1987년 민주화의 요구가 전국민적 염원으로 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서 군사문화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반공안보교육'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멸공교육, 반공교육, 새마을교육, 국민정신교육, 국민윤리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등이 주요한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시민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로 취급되었다.¹⁶⁾ 1968년 박정희 정권은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통한 민족중흥의 교육이념을 내세웠

으나, 이는 군사독재의 합리화를 위한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정권의 장기집권을 겨냥한 유신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은 서구적·이기적·반사회적 교육으로 취급되어 결국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¹⁷⁾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1980년대 초·중반에 걸쳐 1970년대 말에 시도된 국민정신교육이 지속되었으며, 여기에 경제교육, 정치교육, 이념교육 등이 추가되어 국민정신교육이 더욱 다양화되고 강화되었다. 국민정신교육의 바람을 타고 많은 대학에 국민윤리학과가 설치되었다.

세번째 시기는 1987년의 6·29선언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민주화로의 이행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그 논의가 부분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시기이다. 6·29선언이후 대통령직선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화의 대전환기가 마련되었는데, 이에 발맞추어 교육분야에서도 교육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은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천명하기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결국 선언적 교육목표로 끝나고 말았고, 문민정부를 이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은 실천적 차원에서 확산되지 못하였다.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양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의 교육수준(문맹률, 대학진학률 등)은 타 OECD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아졌지만,¹⁸⁾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14)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 한국, 대만,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서울: 유풍출판사, 1999), p.48

15)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남출판사, 2000), p.328

16)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2003), p.209

17) 전득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방안 모색," 『세계정치학회 17차 서울 세계대회 동시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1997), p.4

18)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1980년 39.2%에 불과했던 일반계 고교생들이 대학진학률(전문대 포함)이 97년 80%를 넘어섰고, 다시 6년만인 2003년에는 90.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나 정치문화는 교육수준에 걸맞지 않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정치민주화와 교육민주화가 동시에 추구되었던 제3기의 민주시민교육은 권위주의 체제의 몰락을 환호했던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수준만큼 발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시민교육에 관한 국가적 강제가 거의 완화되고 사라진 민주화의 시대에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⁹⁾

첫째, 시민교육이 아직도 학교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사회·도덕·윤리·국사 등의 교과목을 통하여 이해나 암기위주로 민주주의적 이념, 가치, 제도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기본원칙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 주장을 우기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민주주의적 태도의 일상화가 부족한 것이다.

둘째, 시민교육이 정부가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추상적인 이념과 원칙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데 치중해 왔을 뿐, 학교 바깥의 사회생활, 정치생활과 실천적 측면에서 유리되어 왔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시민교육은 각종 의식개혁의 형태로 정권차원에서 실시됨으로써 정권획득 내지 연장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는 정치적 현상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청년기의 젊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기형적 인간을 만

들고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능력이나 사회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동체의식, 올바른 도덕적 습관의 형성 등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학습되고 습득되어야 하는데, 대학입시에 점수화되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나 학생에 의해서 무시되고 경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교육상황이다. 조혜정은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우리 학교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교육은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잡아 놓은 틀을 그대로 이어온 극히 보수주의적인 교육으로서 자생력을 기를 기회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 해방 전에는 식민지 통제를 위해,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양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교육이 수단화되어 왔던 것이다. 곧 교육의 초점은 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주도적 경제정책에 순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에 대해 침묵하는 탈정치화된 대중을 만드는 데 맞추어졌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가 어떻게 하면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까?’만을 물어 왔지 ‘학교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성숙에 공헌할 수 있을까?’를 애써 묻지 않았던 것이며, 이 결과 학교는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안고 있는 관료조직의 한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버렸다.”²⁰⁾

넷째,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교육의 체계화 내지 강화는 정부의 의지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19)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유중출판사, 1999), pp.339-341

20)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어린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6), p.85

인해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교육과 관련된 학회와 시민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해 가칭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를 중요한 교육주체로 삼아 수행된 한국의 시민교육은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요인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치인들과 시민들 모두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내면화, 일상화, 습관화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 정치공간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상적 이념이며 가치라고 믿어지고 선언되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정치공간에서는 여전히 비민주적 관행, 행태, 언술이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 절차와 실제 정치행태 간의 불일치 또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3) 통일교육의 역사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통일교육의 역사는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넓은 의미로 통일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이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처음 정부가 수립된 이후 통일문제와 관련된 교육은 반공주의로 일관해 왔다. 반공교육은 오히려 공산주의나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어렵게 했으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만길은 반공교육이 산출한 부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철두철미한 반공의식은 북한에 대한 ‘부정’이라는 일방적 사고를 형성하여 소위 ‘적색혐오증’(red complex)을 유발하는데 작용해 왔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세에서부터 북한 정권이 취하는 모든 행위를 비하시키는 태도가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를 하나의 획일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경향도 있다. 말하자면 북한체제와 사회현실에 대한 다면적인 설명과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적색혐오증이야말로 북한이라는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²¹⁾

한국 정치에 있어 적색혐오증은 흔히 색깔논쟁으로 연결되어 왔고, ‘빨갱이’라는 딱지는 인간 말종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의식에 왜곡되게 각인되어 왔다.

반공교육의 기조는 비교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긴 했지만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외적 상황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 교육방향은 한편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실천과정이 강조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안보문제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통일·안보교육에서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들이 동시에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통일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해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탈냉전으로 상징되는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21)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152

초래되기 시작했다. 탈냉전과 더불어 새로운 통일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통일을 평화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정립된 통일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교육 또는 도덕교육의 접근방법이 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²²⁾ 통일교육은 1970년대까지 이데올로기 교육의 시각에서 접근해 왔는데, 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방적 논의를 제한하고 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달,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의 현실이나 통일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부정책의 홍보에 치우친다거나 북한에 대한 반대감정을 심어 주기 때문에 남북간의 화해와 이해를 도모하는데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반공이데올로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덕교육론적 접근은 1980년대 후반기에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반공교육에 대하여 도덕교육론적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종래의 반공교육은 북한에 대한 반대감정을 심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도덕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도록 통일·안보교육으로 바뀌게 되었다. 통일·안보교육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포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북한에 대하여 적대감을 유발하는 요소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적극적인 내용을 강조하게 되었다.²³⁾

최근의 통일교육이 새롭게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이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이다. 종래의 도덕교육론적 접근은 통일에 대한 자세와 의지를 배양하

려는 정의적(情意的) 특성에 중심을 두었으며, 통일에 관한 가치관·태도 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은 북한 실상과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하여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우선적으로 북한 현실과 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통일교육은 종래의 체제와 이념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체제와 이념 중심의 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서 사회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사회의 전반적 특성, 특히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념과 체제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의 통합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라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다.²⁴⁾

그러나 통일교육에 있어 사회문화적 접근방식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이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

22)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해서는 한만길의 연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p.117-120

23)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132

24)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80

화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의 기회와 평화의 근원뿐만 아니라 반평화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평화문화를 위한 행위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기술과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해 평화교육의 목적은 평화에 관한 지식, 기술, 가치와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⁵⁾

평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흔히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의 부재상태나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폭력의 위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 갈통(J. Galtung)의 정의가 그 의미를 잘 나타낸다. 적극적 평화개념은 평화를 구조적 차원에서 정의한다. 그럼으로써 소극적 평화의 한계를 보완한다. 적극적 평화개념은 평화가 파괴되지 않을, 즉 전쟁과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들이 제거된 사회구조의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 등의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²⁶⁾

적극적인 평화개념에 입각한 평화교육을 통해 기존의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대체로 남북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치중하였다면, 이제 평화교육이 도입될 경우 그간의 통일교육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남한사회 내부의 의견분열과 불화를 좁히거나 우리 일상생활에 만연한 비평화를 지적하는 데에 더 큰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런 접근방식을 고려할 경우, 과거의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나 '정치권력의 형식적·기계적 결합'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선

남한사회 내에서, 다음으로 남과 북 사이에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관점은 통일을 위한 교육론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우선 우리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있다. 우리사회 안에 존재하는 집단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평화교육의 관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의 관점은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평화교육은 남북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 평화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와 화해의 증진은 분단체제에서 남북간에 심화되어 온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무엇보다도 평화교육은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남남갈등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식하고 있는 지에서 발생한다. 한국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한국 국민의 대북의식은 이러한 발전에 비례해서 계몽되고 발전해 온 것은 아니었다.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동족 간에 수많은 희생을 초래한 한국전쟁을

25)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p.72

26)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p.355

27)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38

통하여 분단이 고착되었고, 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에 걸쳐 냉전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됨에 따라, 분단은 남북간의 분열과 대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에서 불신과 대결의 구조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분단구조가 우리사회 내부에 투영됨으로써 상생적이라기보다는 상극적인 정치문화를 낳았다. 분단체제하에서 타협과 협상보다는 배제와 반목, 대결의 정치문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평화교육은 상극적인 정치문화를 상생적인 정치문화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남남갈등의 해소는 남북한 주민간의 신뢰구축에 필수적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주민의 국민적 합의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북통합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유인조건이 될 것이고, 남북한의 실질적인 접근을 촉진해 나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²⁸⁾

첫째, 우리의 통일은 '창조적 또는 새로운' 통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두 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단순히 통일이나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민족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간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과정으로서의 새로운 통일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통일은 '과정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를 수립하는 정치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민족 구성원간의 생활공간의 통합, 경제체제의 통합, 문화의 통합, 의식의 통합 등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셋째, 우리의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과거 냉전적 질서 하에서 남과 북은 이기는 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이제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는 국제적 현실 속에서, '이기는 통일'은 더 이상 명분도 실익도 없

다. 어느 한쪽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통일의 방안을 남과 북이 함께 모색해야만 한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은 '창조적 통일', '과정적 통일', '함께 사는 통일' 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8) 통일교육원, 『통일문답』(2001), p.5

3. 갈등문제와 관련한 북한 통일교육의 실태와 한계

(1)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북한교육의 이념적 배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식의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주체사상은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70년 이후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되었다.

북한의 교육은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 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연설과 교시 등을 정리하여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근거한다. 이 테제에 의하면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계급성·혁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성과 노동계급적 성격이 교육에서 나타나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교육을 통해 북한당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넓게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좁게는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무한히 충직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²⁹⁾ 「사회주의 교

육에 관한 테제]에 나타난 북한 교육의 기본 원칙과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 문제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를 갖출 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다. …(중략)…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으로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²⁹⁾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중략)…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³¹⁾

29)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4), p.194

30)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p.483, 재인용

3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8, 재인용. 원전은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북한교육의 이념적 기초는 공산주의적 인간육성, 주체사상, 집단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산주의적 인간의 육성은 북한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이다. 공산주의적 인간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한다.

둘째, 북한의 교육목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있다. 주체적인 교육은 나라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 자연을 잘 알려주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주창한 북한의 유일사상으로서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교육은 집단주의를 지향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넷째, 북한의 교육원리는 교육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 실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³²⁾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은 5개의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첫째는 ‘깨우쳐 주는 방법’이다. 이는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배우는 학생은 토론과 논쟁의 ‘문답식 방법’을 통해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설과 설복’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종합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 먹어야 '산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 강화방법이다.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공산주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정치생활'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생활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조직을 우선시하는, 즉 집단 우선의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규 학교교육이외에 다른 정치사회화의 일차적 매체인 가정과 '사회교양수단' (당과 외곽조직단체, 언론매체)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은 '사회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당의 얼굴'로서 중시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공산주

3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pp.34-35

의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교육시킨다.³³⁾

해방이후 북한의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을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는 ① 사회주의 교육 도입시기(1945.8-1950.6), ② 전쟁 후 복구시기 (1950.6-1959.10), ③ 기술교육 강조시기(1959.10-1966.12), ④ 유일사상 확립시기 (1966.12-1972.7), 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시기(1972-1985),³⁴⁾ ⑥ 고등교육의 대중화시기(1985년 이후)로 말할 수 있다. 유일사상이 확립되기 이전의 세 시기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교육을 도입하고 그것을 제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교육사상과 이론에 근거해서 공산주의적 인간이 육성되었으며, 소련의 학제를 많이 참고하면서 교육제도의 개선과 개혁이 이루어졌다.

유일사상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김정일은 교육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유일사상 확립기 이후의 시기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넷째 시기인 유일사상 확립시기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확립하고, 혁명전통교양과 계급투쟁의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직활동을 통한 정치사상교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시기에 김정일의 교육정책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이론적인 정립, 그리고 주체사상을 통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있다. 여섯 번째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경제적인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국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육에서는 여전히 주체사상, 혁명전통, 집단주의 교양을 역설하고

있다.³⁵⁾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북한은 체제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체제결속을 위한 사상사업의 강화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등을 제시하면서 주체사상을 보완 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다.³⁶⁾ 북한이 이처럼 사상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체제수호를 위한 공여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체사상의 절대성과 혁명성은 북한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저하고 더욱 폐쇄적 체제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³⁷⁾

(2) 북한의 통일교육

북한교육은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적 혁명의식에 투철하고 김일성 부자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한다. 북한 학생이나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 가계를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조건화된 상황속에서 살아간다.³⁸⁾ 이런 상황속에서 남한의 통일교육과 상응하고 접합될 수 있는 북한의 통일교육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33)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pp.206-207

34) 북한은 1975년 9월이후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35)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p.302

36)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붉은기 사상은 이론적 측면에서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신념의 철학' 등 세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체의 혁명철학'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나의 사상은 붉다"고 역설하며,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자기 운명을 끝까지 개척해 나가려는 자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통일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신념의 철학'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신념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한다는 주장이다.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 없이 사는 나라"이다. 진정한 강성대국은 민중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민중을 위한 것으로 사상·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국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3대 기둥으로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내세우고 있다.

37)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04), p.27

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교육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는 민족교육 이념과, 남한관,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교육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교육 이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애국교양이다.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것이 애국주의인데, 사회주의 교양은 학생들을 사회주의체제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의 융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이다. 또한 민족교육의 이념은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다. 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자기 민족의 우수하고 귀중한 유산을 자랑하고 이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창조력을 계승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나아가서 민족교육 이념은 자기 고향 산천과 마을, 자기 직장, 자기 학교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향토애와 국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조국애가 결합될 것을 요구하며, 미제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고 있는 남한을 통일의 그날까지 잊지 말 것을 가르친다.

북한의 교과서에 의하면 남한은 미제가 강점한 식민지이고, 미제침략자의 괴뢰도당에 불과한 소수의 통치자들이 주민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땅이며, 외국독점자본가들이 판을 치는 식민지경제로 인하여 노동자, 농민이 빈곤을 피할 수 없는 약탈과 착취의 땅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남한 현실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로 인하여 비참하다는 식으로 북한교과서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에 의하여 교육된 북한 학생들은 왜곡된 남한관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은 남한을 아직도 해방시켜야 할 지역으로 간주한다. 북한주민들은 해방 후 미국의 점령과 그 침략성으로 인하여 분단된 국토가 북한에 의하여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한반도의 통일은 적화통일, 무력통일, 제국주의자를 제거하는 통일, 같은 민족인 남한을 노예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의 통일교육을 민족관, 남한관, 통일관이란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한 부분도 남한주민이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통일교육에 나타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남한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판단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과연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쌍방의 노력이 있을 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변화하려 하지 않는 북한의 위상에 맞추고 또한 북한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을 추구하려는 남한의 입장은, 별로 소득이 없는 짝사랑 같이 상당히 무모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현실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이다. 남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남한과 통일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남한에 대한 왜곡된 기술을 교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인 이념성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일방적으로 편협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38)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 하는 존재이며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주체사상의 독창성은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혁명적 수령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람의 신체에서 두뇌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사회도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이 곧 생명의 원천임을 주장한다. 수령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논리를 말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은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의 통일교육에서 최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³⁹⁾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이나 통일전선전술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달성하려는 통일에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평화통일을 위한 주민교육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남한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이 통일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일성 사후 1997년 6월부터 발표된 김정일의 통일관련 논문 및 서한을 살펴보면, 그 동안 북한은 대남전략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⁴⁰⁾

북한의 통일방안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북한의 통일교육이 남한의 통일교육과 공통의 지향점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4. 화해와 조화의 원천 : 민주시민교육

(1) 평화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모색

앞에서 주장했듯이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는 정치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화와 반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린이들은 성숙함에 따라 가정환경을 벗어나 학교라는 공식적인 제도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 정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학교교육은 시민의 자질을 배양시키는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확립된 태도와 행동양식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정향을 심어 주기도 한다. 학교는 국가가 어떤 정치질서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들을 개인에게 고취시키려고 할 때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정치교육은 반사회화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체제존속을 위한 사회화교육에 치중하게 되며, 학교교육은 '교화'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교화는 개인이 자신의 태도를 형성할

39)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p.201-215

40)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p.84

권리를 부인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가치들을 포기하게 만들며, 개인을 국가에 봉사하는 단순한 로봇으로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⁴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반사회화과정이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화’(socialization)뿐만 아니라 ‘반사회화’(counter socialization)로 구성된다. 사회화가 현존하는 관습·전통·규칙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라면, 반사회화는 개인에게 독립적인 비판의식을 고양시켜 합리적이며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사회의 과거 경험에 기초한 전통과 가치들을 전달해 주는데, 이것은 미래사회의 가치와 관습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전통의 강조와 더불어 사회화에 관련된 관습들은 기존 사고들과의 일치만을 조장한다. 본질적으로 사회화는 사회내의 지배적인 관습과 가치들을 보존하고,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보수적 성격을 지닌 사회화과정은 반드시 반사회화과정에 의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사회화는 독립적인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비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급변하는 다원적인 사회에서의 민주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사회화를 통한 시민의 반성적 사고능력의 고양은 민주주의가 보수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⁴²⁾

평화교육은 반사회화과정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⁴³⁾ 평화교육이 내세우는 중요한 지향점은 ‘현상유지와 여기에서 조금 나아간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기보다는 ‘대안적인 미래’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현실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있다. 즉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개인이 꿈꾸는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먼저 그려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찾아내는, '미래에서 현재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다.⁴⁴⁾ 평화교육이 지닌 이러한 미래 지향점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녀온 교화적 성격을 탈피하고, 새로운 통일의 대안을 찾는 반사회화 교육을 활성화시킬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우리 사회의 비평화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통일교육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

현행 통일교육은 좀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남북관계 인식, 대북 화해협력정책 등에 대해 교육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현실에 대한 이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미래의 적극적 평화에 대한 전망을 담는 데 역부족이다. 통일교육의 내용에는 정치·경제적 교류와 협력, 군사적 긴장의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존을 통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공존을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 관용, 인권, 복지 등의 보편개념을 담고 있는 적극적 평화의식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완시킨다면, 통일과정에서 양성평등, 지역문제 극복, 경제정의, 생태계 보전 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다.⁴⁵⁾

한만길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실천과제로서 남북의 평화와 우리 사회의 화합에 관한

41) Shirley H. Engle and Anna S. Ochoa 지음, 정세구 역, 『민주시민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5), p.47

42) 정세구 역, 『민주시민교육』, pp.48-50

43) 평화교육이 반사회화교육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 특히 다음 두 가지 요건들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피교육자들에게 다양한 대안적인 견해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피교육자들은 서로 반대되는 견해들을 균형 있게 제 공받을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다양성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화교육에서는 교육자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학습과정에서 교육자의 중립은 다양한 견해들을 보호해 주고, 학생들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찾아갈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44)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p.183

45)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p.20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평화의 관점에서 교육을 실천하고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사례와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사회 개혁적인 시민운동, 평화운동과 결합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남북한 통일은 남한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와 통일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사회단체와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⁶⁾

평화교육적 요소를 통일교육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관통하는 가치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경쟁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평화교육이 제시하는 비폭력, '차이'와 '다름'의 인정, 연대, 상호이해, 공존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통일교육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만연한 군사주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한 '인간안보'가 강조되어야 하고, 다중적 정체성도 거론되어야 한다. '민족적 동질성'을 명분으로 차이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동질화시키려는 시도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내부식민지의 형성이나 진정한 민족국가의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통일교육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은 대부분 단순히 통일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 주된 내용은 세계의 전쟁역사, 한반도의 분단과정,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가체제 특징,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는 제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 정도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도록 개편되었으나, ①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②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③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④ 남북통일과 통일실현의지, ⑤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⑥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⑦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한국의 모습 등의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제7차 교과서에서는 내용상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첫째,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 통일교육은 체제안보관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안보 개념을 군사적 안보에서, 정치·경제·사회·환경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남북의 체제대결, 군사적 대결'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우리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사회·환경적

46)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pp.51-52

47) 7차 교육과정이 지닌 긍정적 변화와 문제점에 관해서는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pp.35-37 참조

문제와 관련하여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목 가능성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는 분단극복의 기본방향으로 제도적, 체제적 통합과 더불어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적대감 청산과 상호 이해에 의한 신뢰구축, 상호 차이인정에 바탕을 둔 공존공영, 평화공존과 협력체제의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일사회의 방향을 열린 민족주의 사회, 남북간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의 관점은 민간 통일교육운동에서 기존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로서, 이것이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민간 통일운동의 중요한 성과이며, 학교통일교육이 평화교육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사회에 대한 기술이 객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서술은 비록 양적으로는 빈약하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북한생활을 소개하고 있고, 북한사회의 장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부정 일변도의 기술에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해에 바탕한 상호 존중이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기초라는 평화교육적 접근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일사회의 미래상이 포용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 통일사회는 남한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단선화되어 기술되었으나, 제7차 교과서에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수준 높은 민주국가'로 통일사회의 상을 제시하고, 21세기 세계 속에서 통일한국의 역할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가교', 동북아시아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 동북아시아의 '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국가', 전통 문화와 동서문화를 통합한 '문화중심 국가'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사회의 한국인상으로서 '자주적인 인간', '화해·협력·평화를 사랑하는 인간',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 미래사회에 대한 기술은 이념과 체제중심의 통일사회관에서 탈냉전적이며,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통일사회관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 생각된다. 이 역시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상 4가지 주요한 내용상의 변화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교과서는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데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이전의 통일교육 내용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제약하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첫째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교과서는 과목마다 집필진이 다른 체제로서 도덕과목의 통일교육상의 내용변화가 다른 교과목에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며, 학교통일교육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주체들인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절대적인데,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

이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도덕교과서의 내용변화가 이론적인 제시에선 진일보하였지만, 생활문화적 접근의 구체성이 매우 빈곤하다는 점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관점이 강화되었지만, 이 접근의 주요내용이 여전히 거대 담론적이고, 북한사회 바라보기, 남북관계 바라보기, 통일사회의 미래 상 등에 집중되고 있다. 분단과 대결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 현실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다.

셋째, 제7차 도덕교과서는 그 내용의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방법론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이 쉽지 않은 서술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차 교과서 서술의 눈에 띄는 변화는 '함께하기'란 형식으로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그 서술체계는 여전히 정리된 담론, 이론을 제시하는 틀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지식전달'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그런 생활태도를 형성하여 가는 평화교육의 방법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깨달음과 자각의 실천에 있다고 할 때, 바람직한 평화교육 교재는 그런 깨달음과 실천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7차 도덕교과서는 북한사회에 대하여 객관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사회의 역사를 우리 사회의 역사로 복원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소극적이라는 제한성을 안고 있다. 일제 하 독립운동에서 현재 북측의 주류를 형성하여온 인사들의 독립활동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그런 예들이다. 그러나,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존과 화해협력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 나의 부족함에 대한 시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교과서는 북한사회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서술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통일교육의 방향은 평화공존모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학생들이 '평화능력', 즉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조건 속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며, 이전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화능력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능력은 곧 통일과정을 이끌어 가는 문제해결능력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평화능력은 통일과 관계된 지식을 포함하여 다층적인 삶의 차원에서 겪게 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며, 통일의 과정과 통일 후 수많은 갈등상황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⁴⁸⁾

48)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248

(3) 시민결사체를 통한 통일교육 모색

민주화 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새롭게 형성된다.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필자는 시민사회를 “국가와 개인 및 가족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결사체의 활동영역”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의하고자 한다.⁴⁹⁾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었으며,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자인 시민결사체들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학교에 버금가는 시민교육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시민결사체에 있어 교육적 역할이 주된 역할은 아니다. 시민결사체는 자신들이 표방하는 이익을 표출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삼고 있다. 시민결사체는 아래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결사체가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추진되는 사회에서 시민결사체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민결사체들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중앙정부에 개인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정부에 대한 투입능력을 높여준다. 둘째, 시민결사체는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결사체는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적 제도, 과정, 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교육을 하며, 새로운 민주적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며, 관용, 신뢰, 절제, 타협의 문화를 심어줌으로써 민주적 규범에 관한 헌신을 강화한다. 셋째, 자치적 시민결사체는 국가, 공공기관, 정당, 사적 생산자에 걸린 과부하를 덜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정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여성이나 소수파의 이익이 대표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넷째, 밀도 높은 자발적 시민결사체 네트워크는 사회적 협력,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많

은 공동체일수록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통합’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불법적 권력찬탈이나 다수의 독재에 의한 자의적, 폭군적 권력에 대한 최종적인 저항의 보루역할을 수행한다.⁵⁰⁾

위에서 제시된 역할 중 특히 두 번째 역할은 시민결사체가 교육주체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보여준다. 시민결사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선택능력과 판단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들을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시민’으로 거듭나게 도와준다.

한국에서 모든 시민결사체가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결사체는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통일관련 시민결사체는 ‘민주주의의 학교’뿐만 아니라, ‘통일의 학교’로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 요구된다.

통일관련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식습득에 중점이 있다. 분단의 배경,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기존의 통일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 통일사회상을 그

4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2), p.181

50)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pp.229-230, p.295

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정보와 지식차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습득이 곧 통일의식의 함양과 통일능력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통일능력 향상을 위한 가치와 태도의 내면화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단체의 교육목적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의식 교육, 그리고 그 주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은 통일문제가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서 출발하여 통일문제는 ‘나의 삶의 문제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두 번째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성인프로그램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주로 강의와 토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기보다는 주로 강의 이후 질의응답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강의중심의 일방적 학습방법은 통일에 관한 국민합의를 창출한다거나 개개인의 통일관의 합리적 정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방해한다.

넷째, 민간단체의 교육내용의 주제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한 통일의 실현’이라는 가치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폭력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남북한간의 차이 해소를 통한 공동체의식 고양이다. 그러나 이해의 방식과 차이 해소의 방법에 관해 각 민간단체마다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적대적 태도의 대상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북한은 남한과 다르다. 그러나 같은 점을 발견하고 극대화시켜서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자’라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

르고 있다.

다섯 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일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단체들의 통일교육 내용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 여성들은 통일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여성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면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한 주체이므로, 여성들의 통일관은 현실적으로 사회, 가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고,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괄될 때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여섯 째,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현실적 조건은 각 단체의 활동가이거나, 중간지도자,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등 평범한 일반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독일 통일교육의 사례

독일의 정치교육에 있어 국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⁵¹⁾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초기에 기초가 세워졌다. 승전국들은 정치교육

51)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 문헌의 도움을 받았다.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서울: 평민사, 1992);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을 통해 독일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나치즘의 막강한 영향을 제거하고 시민의식을 배양하여 민주적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민주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따르면 학교제도 전체는 국가의 감독 하에 있다. 학교는 보통 국공립학교이며, 약간의 사립학교가 있지만 이들도 국가의 감독 하에 놓여 있다. 각 연방주가 자기 주의 교육을 관할하지만, 상설 교육부장관회의를 통하여 연방적 수준에서 각 주의 교육정책은 조정되고 있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연방주의 과제이다.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교육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연방정치교육원’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원은 내무성의 산하기관이지만, 최고책임자는 각 정당에서 임명된 3명으로 구성된다. 시민교육이 정권 담당자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하여 독일은 각 정당에서 교육책임자를 파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민당과 기사당에서 1명, 사민당에서 1명, 자민당에서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집권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청소년, 직장인, 심지어 군인들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교육기관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독일 국민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연방정치교육원은 교육부장관회의와의 협의 아래 학교수업을 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왔다. 약 백만부에 달하는 ‘정치교육정보’ 이외에도 ‘논쟁점’, ‘고속촬영’, ‘정치신문’ 등 각각 50만부 이상 발간되는 시리즈와 잡지, 그리고 영상자료 등을 제공해 왔다. 또한 학교 밖의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연방정치교육원은 많은 서적과 신문, 잡

지, 시청각자료 및 각종 회의개최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참여자세를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독일에서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치교육에 크게 공헌하는 조직으로 ‘정치재단’이 있다. 정치재단은 연방의회에 대의원을 내보낸 다섯 개의 큰 정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사민당에 가까운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ES: 1925년 설립), 기민당에 가까운 콘라트-아테나워 재단(KAS: 1964년 설립), 기사당에 가까운 한스-자이텔 재단(HSS: 1967년 설립), 자민당에 가까운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NS: 1958년 설립), 그리고 녹색당에 가까운 레겐보겐 재단협회(Regenbogen: 1988년 결성)가 있다. 정치교육은 5개 재단의 국내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5개 재단 모두는 시민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민주사회에 능동적으로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게 하며, 시민으로 하여금 복잡하게 되어 가는 세계에서 정치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 재단의 재정은 재단자본에 의한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연방예산의 지원에 의존한다.

통일이전의 서독의 정치교육에 있어, 하나의 특이한 사실은 통일교육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서독인의

경우,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독일 민족주의가 초래한 엄청난 역사적 비극, 즉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독일인의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인은 분단이후의 서독이 성취한 자본주의적 성공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자족하였기 때문이다. 서독에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민간 통일교육의 전례도 찾기가 힘들었다. 서독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을 독자적으로 떼어내어 가르치기보다는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교수되었고, 그래서 통일문제는 항상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문제와 결합되었다. 통일되기 이전까지 서독이 해온 주된 교육은 평화교육이었다.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관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진보적인 성격을 띠었다.

민주시민교육으로 무장된 서독인들도 막상 예상치 못했던 통일의 기호가 다가오자,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구 동독 산업체의 도산 및 대량실업, 동서독 임금격차, 재산권 반환문제,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서독주민들의 희생 등은 통일독일에서의 사회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분단시 형성되었던 두 정치체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구 동독체제 하에서 생성되었던 동독주민들의 심리적 억압, 그리고 서독주도의 일방적 체제통합과정 등도 중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과거 서독의 막강했던 경제력 덕분에 어렵게나마 경제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사회·문화 및 심리적 차원에서는 통합의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독일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마음의 벽’ 또는 ‘한 국가 내 두 사회’라는 상징적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일독일의 체제에 대한 구 동독주민들의 적응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통일 이후 냉혹해진 사회적 환경, 유대감의 상실, 가족 및 친

시간에 느꼈던 포근함의 상실, 분주함과 스트레스 등으로 요약된다. 둘째, 지역주민간의 상호불신과 갈등이다. 두 지역주민들은 상대지역 주민을 범주화시켜 각각 거만함, 신뢰성 부족,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의 '서쪽 것들' (Wessis)과 게으름, 무능함 등의 의미가 내포된 '동쪽 것들' (Ossis)이라는 말로 서로를 폄하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부정적 평가는 '마음의 벽'을 쌓았다. 셋째, 독일국민들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사회·문화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체제붕괴를 경험한 동독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독지역 주민들도 통일이전보다 낮은 자긍심을 보인다. 정체성 위기는 정치·사회·문화의 혼란현상으로도 나타난다.

분단 독일의 물리적 장벽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마음속의 장벽은 동서독인 모두에게 다 있다. 이 점은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생각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동서독인이 같이 근무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주로 동독인이고, 그들이 소수인 경우는 갈등이 더욱 심하게 노출된다. 통일은 제도적이고 지리적인 화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슴과 머리가 함께 하는, 즉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갈등도 극복해야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 완성된 시점부터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밀도있게 추진했다. 우선 구 동독지역의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과거 서독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던 연방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구 동독지역에 도입했으며, 동서독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과 토론의 장을 확대했다. 그러나 문화적 이질성은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통합, 의식에 있어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민교육을 계속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한은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 합리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통일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분명하게 그려낼 수는 없지만, 원칙적이고 개략적으로나마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국민의 의식 속에 심어놓은 상태로 통일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아가야 통일이 후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발전 모색

통일 이후 독일시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을 연구한 김해순은 통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서독 주민은 통일 전에 인적, 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의 교류와 교환정책을 통해서 서로를 상당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로를 너무나 모르고 지냈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그들의 차이는 예상외로 크고, 이 점에서 기인한 갈등과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동서독인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하여 남북한 동포가 내적인 통일을 동시에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 동포는 50년이 넘게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면서 각기 다른 세계관, 가치관, 생활관을 익혀 왔다. 사회화과정에서 굳어진 이런 내면의 세계와 그 영향을 하루 아침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독일통일이 12년이 지나도 동서독인의 갈등과 차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하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세대가 지나야 된다고 예측하기도 한다.”⁵²⁾

52)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의 시사점』 (통일교육원, 2002), p.195

우리는 여기서 사회문화적 교류는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너무나 모르고 지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통일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통일교육이 남북통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Machiavellian virtu)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운명 (fortuna)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이 되었을 때 추구해야 할 이념과 체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국가의 이념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란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평등·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 복지를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⁵³⁾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현재 우리 남한이 갖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남한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며, 민주적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남한의 정치체제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이념은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 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면서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려는 통합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통일한국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민족주의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의 갈등을 통합하는 민족통합의 지도이념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통

합을 지향하고, 통일한국의 국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 국민적 소속감, 참여의식을 부여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폐쇄적 민족주의는 앞으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⁵⁴⁾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남북한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 및 화해·협력의식을 형성시켜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을 근간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통일의 첫 관문임을 깨닫게 한다. 셋째, 분단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통일의지를 함양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반공 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북한체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식태도의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화해협력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보와 협력의 조화를 강조한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통일은 화해협력이 발전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53)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4), p.176

54)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2001), p.182

남한의 통일교육은 전향적인 것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통일교육은 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권과 체제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현재 체제생존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다면 체제생존에 급급하기보다 내부적 개혁과 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변화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도 사회적 일탈행위들의 증가와 이데올로기의 통제력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⁵⁵⁾ 이러한 현상은 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개방과 개혁정책을 수행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의 측면에서 공동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⁵⁶⁾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통일교육은 만남과 상호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북한주민과의 실질적 접촉을 통한 교육은 이루지 못한 채, 언론이나 공교육을 통해 추상적인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막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을 뿐이었다.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상호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화를 모색해 나가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라는 데에도 커다란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는 그동안 단절된 세계에 살아왔던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다름'을 '같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다름'을 다르다고 인식하고, 그 '다름'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서로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케 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

대감 해소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간의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평화교육과 접목된 통일교육은 보다 큰 카테고리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이전 사회화과정이라는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반사회화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 다가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민족중심적인 애국심이 아닌, '열린 애국심'을 가진 덕 있는 시민으로 변화해야 한다.

55) 북한의 사회통합을 연구한 허유미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사회통합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북한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조직을 통한 사상교육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유연한 사회조직 관리방법을 취하고 있다. 조직규범의 이완현상에 대해 강한 처벌과 출명 등 강제적 통제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당과 국가 차원에서 초급단체의 사회조직 이탈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현 김정일체제의 사회통합방식은 이종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유미, "사회조직의 실태를 통해 본 김정일체제의 사회통합방식",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3권』 (통일부, 2002), p.194

56)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p.261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교육통계연보』, 2003
-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사랑, 2004
- 이정희·김웅진 외, 『민주주의의 확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의문
현 집』,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 김해순, 『통일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통일교육원, 2002
-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이현근, 「초·중등생 통일의식 변화 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의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홍보·교류협력·기타』
(통일부, 2000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2002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2000
-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1992
- 전득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방안 모색」,
『세계정치학회 17차 서울세계대회 동시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1997
-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 한국, 대만,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서울: 유평출판사, 1999
- 정세구 역, Shirley H. Engle and Anna S. Ochoa,
『민주시민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5
-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원, 2002

-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어린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6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2001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4
- 하유미, 「사회조직의 실태를 통해 본 김정일체제의 사회통합방식」,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3권』,
통일부, 2002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통일연구원, 2003
-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2003
- 홍득표, 「서양 정치교육의 체제와 내용: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정치학회17차 서울세계대회 동시 학술대회 논문집
-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1997

Machivelli, 1954, *The Prince*. Translated by Mark Musa, New York: St. Martin's Press

Plato, 1968, *Republic*, Translated by Allan Bloom, New York: Basic Books

Rousseau Jean-Jacques, 1953, *The Confessions*. Translated by J. M. Cohen. London: Penguin Classics

Ⅲ.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갈등과 해소방안: 통일 前後의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상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2. 통일전 편견과 선입견의 형성과정
3. 통일전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갈등
4. 통일후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갈등
5. 통일후 정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
6. 결론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교훈

통일교육총서 10

갈등을 넘어 통일로

1. 서론

2차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분단된 이후 서독에서의 냉전 의식과 반공주의는 소련에 대한 거부감과⁵⁷⁾ 한국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한국전쟁과 유사한 사건이 분단국 독일에서 소련과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소련과 동독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이러한 두려움과 거부감 및 적대감은 통일 전 미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의존적인 감정과 함께 발전하며 교육에 의하여 재생산되었는데, 이것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굳어지면서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과 서독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⁵⁸⁾

통일 이전의 독일은 분단국으로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독일은 '마음속의 분단'으로 인해 우리와 같은 구조의 이념적 갈등을 가져왔으며, 또한 현재도 유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에 존재하는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7) 서독에서는 소련이 독일분단의 원흉일 뿐만 아니라 분단된 이후에는 베를린을 봉쇄하는 등 각종 악의 주범이라고 인식했었다.

58) Benz, Wolfgang, Westliche Feindbilder im Kalten Krieg, in: Benz, Ute/Benz, Wolfgang (Hg.) Deutschland, deine Kinder, Zur Prägung von Feindbildern in Ost und West, 2001,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p. 42
서독지역 주민들과 동독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어 인식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 독일주민 상호간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을 해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이 증대해왔다.

이런 인식 하에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도 아울러 고찰하면서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찾으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남남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남갈등의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다.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으려는 시도는 있어왔지만, 남남갈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교훈을 찾고,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다. 독일 내에서도 동독지역 주민들과 서독지역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장벽'을 해소하지 못해왔을 정도로 이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독일에서 양쪽지역 주민들 사이에 편견과 선입견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묘사하는 글들은 더러 있지만, 정작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독일의 논문과 저서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그만큼 이 주제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지만, 독일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제2장에서 통일 전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았던 동독지역 주민들과 서독지역 주민들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70년대 초 서독에서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갈등과 국론분열 양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통일 후 동독출신 주민들과 서독출신 주민들 사이의 '마음의 장벽'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사회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서술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서술을 바탕으로 통일 후 정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결론인 제6장에서는 우선 남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또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통일전 편견과 선입견의 형성과정⁵⁹⁾

(1) 통일전 동독의 정치교육

옛 동독의 정부는 자본주의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해방문제, 예를 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das Recht auf Arbeit), 교육에 있어서 특권층 제거,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남녀평등”⁶⁰⁾ 등을 사회주의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런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옛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권위주의국가인 옛 동독에서 형성된 주민들의 정체성은 상명하달식의 문화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갈등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결여된 채 만들어진 것이었다. 국가권력이 당에 독점적으로 집중되었던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행동양식이 강요되는 가운데 상명하달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⁶¹⁾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서독에서 이룩된 성과와 동독체제가 비교되는 상황에서 항상 흔들리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으나,⁶²⁾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체제순응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옛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평등한 사회관계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달시키자는 목표 하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 똑같이 만들기’와 과거의 특권층을 없애면서 동시에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었던 양상 등도 동시에 사회 속에 내재하였다. 이 두 측면은 모순관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모순 속에서 만들어진 옛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은 이중성

을 띠었다.

옛 동독정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고, 또 어떤 이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실천(Praxis)을 설정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추구하는 이런 요소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도록 하여, 결국 옛 동독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체제를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정부의 이런 시도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설정한 규범에 주민들이 적응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식으로 충성심을 고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식적인 세계와 비공식적인 세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중적 생활 방식을 몸에 습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식적인 견해, 즉 정부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사적인 견해가 구별되는 이중성이 형성되었고, 이 양자 사이에 괴리가 클수록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선전으로 수렴하기 어려웠던 주민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형성되었다.⁶³⁾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중적 정치의식이 옛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정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유도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옛 동독의 대다수 주민들은 소시민적 절충주의 속에서 편의에 따라 쉽게 굴복하며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동독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서독관계를 포괄하는 ‘독일문제’를 가르칠 때 기본지침이 되었던 것

59) 이 부분은 정상돈, “독일의 정치교육: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남북한 사회문화 변동과 21세기 한국인상(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0-지-1, (2001) 중 II장과 III장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요약하여 작성하였다.

60) Dumcke, Wolfgang, Politische Bildung und Identitätskrise, in: Adolf H. Noll/Lutz R. Reuter (Hg.),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Geschichte, Konzeptionen, Perspektiven, Leske + Budrich, Opladen 1993, p.40

61) 위의 책, p.41

62) Braun, Volker, Langsam knirschender Morgen, 1987, Halle Leipzig

63) Dumcke, Wolfgang, Politische Bildung und Identitätskrise, in: Adolf H. Noll/Lutz R. Reuter (Hg.),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Geschichte, Konzeptionen, Perspektiven, Leske + Budrich, Opladen 1993, p.45, Autorenkollektiv, Aufbruch in die Zukunft, Junge Wissenschaftler zu Gesellschaft und Erziehung, 1990, Berlin

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었고, 이것에 입각하여 동독을 진보적인 국가인 반면, 서독은 제국주의자들이 독일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사회주의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국가라고 가르쳤다.⁶⁴⁾

또한 옛 동독정부는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스스로는 인본주의를 추구하지만, 서방세계는 파시즘이나 제국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합리화시키고자 하였다.⁶⁵⁾ 이런 맥락에서 서독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존재로 묘사되었고, 독일통일은 결국 사회주의 동독체제의 승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서독의 지배계급이 항상 동독을 붕괴시키려 획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으로 동독을 흡수·합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가르쳤다.⁶⁶⁾

이런 방식으로 서방세계와 서독은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체제이며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었는데, 바로 이렇듯 문제가 많은 서독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독에서 학교교육은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을 키우듯, 사회주의의 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청소년들에게 키워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동독이야말로 민족통일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렇게 동독주민들의 서독 및 서독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970년 이후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고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며 동·서독관계가 긴장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자 동독정부는 동독의 주민과 청소년들이 서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동독의 학교교재에서 1970년대 동서 양 진영간에 새롭게 전개되는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소개할 때 사회주의국가들이야말로 이러한 노력을 주

도하는 세력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비록 제국주의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국가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평화공존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선전하였다.⁶⁷⁾

그리고 서독이 추진했던 신동방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에곤 바(Egon Bahr)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정책을 보다 유연해진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2) 통일전 서독의 정치교육

옛 서독에서 정치교육이란 피교육자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정치적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의미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식을 함양시키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시행되어 왔다.⁶⁸⁾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안별로 대립적인 논쟁거리가 있는 경우, 이들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소개하며 비판의식과 해결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64) Jeismann, Karl-Ernst/Kosthorst, Erich,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den geschichtlichen Unterrichtswerk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p.133

65) Dumcke, Wolfgang, Politische Bildung und Identitätskrise, in: Adolf H. Noll/Lutz R. Reuter (Hg.),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Geschichte, Konzeptionen, Perspektiven, Leske + Budrich, Opladen 1993, p.48

66) Jeismann, Karl-Ernst/Kosthorst, Erich,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den geschichtlichen Unterrichtswerk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pp.134-135

67) 위의 책, p.157

68) Misselwitz, Hans-J., Politische Bildung,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pp.570-571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교육도 분단, 통일문제 및 동독문제와 관련하여서 만큼은 편향성을 지녀왔다.

옛 서독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동독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지식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나, 반공주의에 젖어 동독의 실상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도 서독의 모든 것이 동독의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였었다.⁶⁹⁾ 이런 맥락에서 보쓰만(Boßmann)은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편향적이었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반면, 동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지적하였다.⁷⁰⁾

예를 들어 사회과목의 교재는 동독을 군비증강과 지하활동을 통하여 서독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재무장을 해야 하며 서독주민들은 서독식 체제의 주어진 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내용이 구성되었다. 즉 서독에서 동독교육은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동유럽과 대비되는 서방세계로의 편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1978년 독일연방의회에서 ‘내독관계위원회(Ausschuß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가 소집되었을 때 학교연합체의 회장이었던 프리제(Friese)는 변화하는 동·서독관계에 어울리지 않게 서독과 동독이 적대적 관계에 있던 70년대 이전의 모습을 학교수업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적인 양상을 전달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⁷¹⁾

이런 지적이 있은 후 1978년 11월 23일에 옛 서독의 각 주정부에 소속된 문화성장관들이 모여서 ‘학교수업에서의 독일문제’(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하면서 동독문제와 동·서독관계에 대한 교육을 개선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학급에서 교육의

양을 확대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서독의 기본법을 옛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기준과 척도로 삼았던 것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블랙(Bleek)은 옛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정치 및 사회체제가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고찰되지 못하고 서독의 체제를 합리화시키는데 필요한 대립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⁷²⁾ 이런 맥락에서 동독과 서독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대립되는 존재로 묘사될 뿐이라고 블랙은 비판하였던 것이다. 또한 시버트(Siebert)는 1970년에 옛 서독에서 학교의 교재가 지향하는 바는 동독체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서독의 체제를 상대적으로 보다 바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독과 비교한다면 서독이 가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며 청소년들이 흑백논리로 사고하도록 하였다.⁷³⁾ 이런 것들은 서독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동독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츠라프(Zitzlaff)는 서독의 학교가 동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동독체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며, 동독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학교 교재에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69) Freiwald, Helmut/Moldenhauer, Gebhard,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Unterrichtswerken sowie in ausgewählten Richtlinien des Faches Sozialkunde/Politik/Gemeinschaftskunde für die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p.292

70) Bößmann, Dieter (Hg.), Schüler über die Einheit der Nation, Ergebnisse einer Umfrage, Frankfurt, 1978

71) Freiwald, Helmut/Moldenhauer, Gebhard,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Unterrichtswerken sowie in ausgewählten Richtlinien des Faches Sozialkunde/Politik/Gemeinschaftskunde für die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p.293

72) Bleek, Wilhelm, Zwischendeutsche Vergleiche, Politische Probleme und politikwissenschaftliche Möglichkeiten, in: Deutschland Archiv, Nr. 7/1982

73) Siebert, Horst, Der andere Teil Deutschlands in Schulbüchern der DDR und der BRD, Hamburg, 1970

주장하였다.⁷⁴⁾ 이렇게 동독교육을 통해서 서독청소년들에게 형성된 동독 및 동독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당시 어른들의 의식을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통일 후 사회통합에 장애물로 기능한다.

학교에서의 동독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었으나,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동독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창출하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인 데탕트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는데, 사민당 후보였던 브란트가 1969년에 자민당(FDP)과 연합하여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적대적 대동독정책을 넘어서서 브란트 수상이 전향적으로 대동독 화해정책을 추진하자 야당이었던 기민당(CDU)과 기사련(CSU)은 격렬하게 브란트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론분열 양상이 초래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통일 전 동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념적 갈등이 어떻게 초래되었는지를 살펴보자.

3. 통일전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갈등⁷⁵⁾

(1) 서독 내부의 갈등

통일 전 옛 서독에서 동독문제와 관련하여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초래된 갈등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브란트 정부가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추진하면서 1972년에 발효된 동서독기본조약(Grundlagenvertrag)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전개된 논쟁을 들 수 있다. 동서독기본조약과 관련하여 야당이 브란트 정부를 비판한 내용과 야당의 비판에 대하여 정부가 대응한 내용 중 핵심되는 것만 추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기본법에 따르면 '단일' 독일민족이라는 존재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브란트 정부가 동독 정부와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에는 양쪽 독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들어있지 않다고 야당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은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 이나 '독일민족' 혹은 '독일 통일' 같은 개념이 동서독기본조약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보고 브란트 정부가 통일을 포기하고 동독과 분단계약(Teilungsvertrag)을 체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74) Zitzlaff, Dietrich, The Themenbereiche ?DDR? und ?Deutsche Frage? in Sozialkundebuchern der Sekundarstufe I, in: C. Lessing/K. G. Fischer (Hg.), Deutsche Frage in Geschichte, Politik und Politischer Bildung, Stuttgart, 1982

75) 이 부분은 정상돈, "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8, (1999) 중 II장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요약하여 작성하였다.

〈표 1〉 신동방정책과 관련한 서독 내부의 갈등

| 쟁점 | 야당의 비판 | 브란트정부의 대응 |
|------------------|---|---|
| 동서독 기본조약의 성격 | · 동서독기본조약은 분단계약 ·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독의 이익을 불충분하게 표현하며 동서독 관계를 정의 | · 동서독기본조약은 분단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첫걸음 · 동서독기본조약은 동서독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동서독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 |
| 동서독 기본조약의 정당성 | 동독을 동등한 계약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와 부자유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 동독을 동등한 계약자로 취급하는 것은 동독의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것 |
| 동서독교류의 형평성 | 동독은 서독의 책자를 금지하는 반면, 서독은 동독의 책자를 금지하지 않음. 이것은 불공평한 게임 | 인적교류를 통하여 서독의 정치사상이 동독에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따라서 동독이 서독의 책자를 금지하는 것에 과민 반응할 필요 없음 |
| 동서독 기본조약이 초래한 효과 | 동서독교류를 통하여 서독이 동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을 변화시킬 것 | 서독의 체제는 동독의 체제보다 우월. 따라서 보다 많은 접촉은 동독을 수세에 처하게 할 것 |

이에 대하여 브란트 정부는 민족문제를 기본조약에 언급할 경우 민족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는 동독과 비생산적인 논쟁과 갈등만 초래하게 되므로⁷⁶⁾ 형식적으로 민족문제를 언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민족문제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야당을 재비판하였다. 그리고 민족이란 것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⁷⁷⁾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민족이 그 자체로서 존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족의 구성원들이 갖는 귀속감의 보존이 중요한데 분단상황으로 이 귀속감이 위협받고 있다고 브란트 정부는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주민들간의 접촉과 방송교류를 통해서 독일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실질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조약에 민족이란 문구를 삽

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이란 개념의 사용여부로 동독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브란트 정부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였다.

동서독기본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은 동서독기본조약이 단지 동서독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동서독관계를 정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조약에 서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란트 정부는 서로 다른 나라들은 각각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비하여 동서독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동서독기본조약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토대로서의 수단이지 동서독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브란트 정부는 야당이 기본조약에 많은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서독의 이익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려고 할 경우 훗날 정상적인 관계 혹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더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⁷⁶⁾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다시 비판하였다.

76) Niclau, β, Karlheinz: 1977, Kontroverse Deutschlandpolitik, Die politische Auseinandersetz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en Grundlagenvertrag mit der DDR,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Alfred Metzner Verlag GmbH Frankfurt am Main, p.63

77) 크로이즈만(Kreuzmann): 서독 연방의회 14차 회의, 1973년 2월 15일

78) 멧츠거(Metzger): 서독연방의회 14차 회의, 1973년 2월 15일

동서독기본조약이 정당성을 갖느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은 서독정부가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의 상대인 동독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 자유서독과 공산독재국가인 동독을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자유와 부자유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브란트 정부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야당은 이것이 법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힘과 폭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독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위협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서독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야당은 동서독 주민들이 상호 방문할 경우 이것을 동독정부가 악용하여 사상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서독에 자유로이 침투할 것이 예상되지만, 브란트 정부가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침투행위에 대비하는 것을 빠뜨렸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서독에서는 공산주의에 관한 책들이 준비하게 널려있는데 반해서 동독에는 서독의 정치사상을 전달하는 책자가 전무하니 이것은 공평한 경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교류를 브란트 정부가 추진하니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hrung)정책을 통하여 서독이 동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독이 서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⁷⁹⁾ 야당은 브란트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브란트 정부는 동독을 동등한 계약자로 취급한 것은 동독의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독과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자유와 부자유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응하였다. 그리고 브란트정부는 서독과 동독이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독정부가 비록 서독의 신문들과 책자들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서독사람들이 가서 전달하거나 동독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접하

게 되는 사상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사상은 ‘물이 틈새로 스며들 듯’ 동독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⁸⁰⁾ 동독에서 서독의 정치사상에 관한 책들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야당이 기본조약에 브란트 정부가 동독의 사상적·인적 침투행위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브란트 정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동독정부에게 서독으로부터의 침투행위 금지라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은 동독과 서독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기본조약이 추구하는 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대응하였다.

그리고 브란트 정부는 서독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자유에 기초를 둔 서독의 사회체제는 동독의 체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독 내 반민주세력과의 대결에서도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교류를 하게 되면 서독이 수세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이 수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브란트 정부는 말하면서 야당의 걱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브란트 정부는 양쪽 독일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살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보다 많은 접촉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브란트 정부는 분단의 결과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하여 동서독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79) 바젤(Barzel), 서독연방의회 7차 회의(1973년 1월 18일)

80) 사민당 국회의원인 회만(Hohmann)은 사상이나 정보는 물과 같아서 모든 틈새로 스며들어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서독연방의회 30차 회의, 1973년 5월 10일)

내부적으로 야당의 비판을 극복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절치부심 하였다. 그런데 신동방정책과 대동독화해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야당세력뿐만이 아니라 화해정책의 대상이자 관계개선의 파트너였던 동독정부도 서독정부를 곤경에 빠트렸다. 동독정부가 동서독간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이를 통해 서독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를 살펴보자.

(2) 동서독간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서독 내부의 갈등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두 국가사이에 수시로 갈등상황이 초래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두 체제로서, 자본주의체제인 서독과 사회주의체제인 동독의 당국자들과 또 그 체제 안에서 상이한 이념을 교육받아왔던 동서독 주민들이 상호간에 교류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⁸¹⁾

서독과 동독은 다른 한 쪽의 독일을 상대하는 정책(대동독정책과 대서독정책)에서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서독이 대동독정책에서 목표로 삼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교류활성화’와 ‘상호간의 통신’, 그리고 ‘의사소통의 확대’ 등은 동독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해석되었다. 서독정부의 입장에서 방송과 TV시청, 전화, 편지와 우편물교환 등은 관계정상화의 징표이었던데 반해서, 동독정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위협스러운 것이었고 동독주민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것이거나 동독의 정치질서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서독은 통신교류를 증대하려고 하였던 반면에 동독은 통신교류를 제한하려고 하면서 서로 대립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갈등이 초래되었다.⁸²⁾

서독과의 수교를 통해 활발해진 인적교류는 동독 내부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동독의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동독의 국가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리하여 동독은 대서독 관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 시킨다는 의미에서 '차단정책' (Abgrenzungspolitik)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동독주민들이 동독의 국가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동독의 개방과 함께 생기게 되는 문제점들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서독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었으며⁸¹⁾ 대서독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동독정부가 취한 차단정책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동독이 취한 차단정책의 유형들

| |
|--|
| · 동베를린에 상주하는 서독대표부의 방문객을 통제하고 감시했던 행위 |
| · 동독을 방문하는 사람들중 일부에게 입국을 거부하였던 행위 |
| · 서독특파원들이 동독에서 보도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들로서 슈피겔紙의 특파원이었던 메트케와 ZDF방송국의 특파원이었던 판 로이엔(van Loyen)을 추방하거나 슈피겔紙의 동베를린 지사를 폐쇄하였던 행위 |
| ·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연결하는 도로의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킨 행위 |
| ·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의무적으로 환전해야하는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서 서독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던 개인들간의 여행과 방문의 활성화를 방해하려고 했던 행위 등 |

81)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olitik und Wirtschaft der DDR (IPW), Gesamtedaktion von Peter Klein und Stefan Doernberg, Friedliche Koexistenz in Europa, Berlin(Ost), 1977, p.216

82) Bruns, Wilhelm: 1982, Deutsch-deutsche Beziehungen, Prämissen, Probleme, Perspektiven, 3 版, Leske Verlag + Budrich GmbH, Opladen, p.81

83) Weidenfeld, W./Korte, K.-R., 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 561

서독정부는 동독정부가 동베를린에 상주하는 서독대표부의 방문객들을 감시·통제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복을 취하기 위하여 본에 상주하는 동독대표부의 방문객들을 감시·통제하지는 않았고,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의 일부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보복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동독정부가 서독의 신문사나 방송국의 특파원들을 추방한다고 동독신문사나 방송국의 특파원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지도 않았다.

즉 동독정부가 동독방문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서독정부가 내독경제 교류(內獨經濟交流)나 서독주민들의 동독방문에 제동을 가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동독정부에게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독의 대동독 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서독주민들이 동독을 방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여 동독의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히는 시도는 오히려 동독의 보수세력들로 - 특히 동·서독간의 교류를 통하여 동독체제의 내부적 안정성이 이미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독의 보수세력들로 - 하여금 동·서독 교류에 반발할 구실을 제공하고, 이것은 동·서독 교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든다고 피하였다.⁸⁴⁾

그러다 보니 동독이 서독과의 관계정상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동독의 방해공작수단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서독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독과 관련되거나 서독의 대동독정책에 관련된 문제들은 서독의 여론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당시의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은 동독의 차단정책에 대한 서독정부의 소극적이고도 유화적인 대응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이용하면서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를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서독 정부의 대동독정책은 70년대 서독내의 끊임없는 정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야당이 동독의 차단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서독정부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동독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분야에서 제동을 가하여 보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UN을 통하여 동독에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었지만 후자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⁸⁵⁾

〈표 3〉 동서독교류를 통하여 동독이 취했던 경제적 이익

| |
|--|
| · 서독정부는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동독의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70년대 당시) 매년 약 4억 마르크 정도를 동독에 지불하였다. |
| · 서독주민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의무적으로 교환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과 여행시 지출하는 것을 통해서 동독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 |
| · 내국경제교류를 통하여 동독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 |

그러나 기민당과 기사당은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동독이 서독과의 교류를 통해서 취했던 경제적 이익에 서독정부가 제동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어도 동독정부가 서독에 대해서 함부로 차단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슈미트 정부가 잘못된 대동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3〉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항목과 관련하여

84)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의 차단정책에 대해서 취했던 유일한 보복조치라고 한다면 - 동독정부가 1980년 서독주민들의 동독 방문 시 교환해야 하는 의무적 환전비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 동독정부가 서독과의 경제교류에서 대금지불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급유예를 해줬던 것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고작이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결코 보복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달래는 방식의 유화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슈미트 수상이 81년에 수상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서독주민들의 동독방문 시 지불해야하는 의무환전비율을 다시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독에 차관과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합의하였던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슈미트 수상은 82년 수상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콜이 수상으로 집권하면서 대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였다.

85) Bruns, Wilhelm: 1982, Deutsch-deutsche Beziehungen, Prämisse, Probleme, Perspektiven, 3版, Leske Verlag + Budrich GmbH, Opladen, p.103

1977년 당시 ‘내독관계성’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장관이었던 프랑케(Franke)는 다음과 같은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할 것을 서독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였다. 서베를린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서독정부의 입장에서 서베를린을 살아있는 도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서독과 서베를린의 왕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동독이 1951년과 1972년 사이에 서베를린과 서독사이에 위치한 동독의 고속도로 사용료를 계속 인상시켰을 정도로 이 문제에 관한 갈자루는 동독이 쥐고 있었다. 그리하여 서독정부가 도로이용을 통해 동독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동독방문과 우편물 교환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라고 프랑케 장관은 말하였다.

하지만 이런 현실상의 문제점을 서독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않고 동서독교류를 통하여 동독에 돌아가는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서독이 이러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제재를 가하려고 하기만 해도 동독이 굴복할 것처럼 여론에 부각시키는 야당이 문제라고 프랑케는 지적하면서 동독이 교류를 통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서독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독이 동독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을 줄이려고 할 경우 그것은 서독에 돌아오는 비경제적 차원의 이익이 줄어들 수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내독경제교류(內獨經濟交流)를 서독 측에서 통제하여 동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프랑케는 그러한 시도는 이미 이전에 아데나워 수상(기민당)이 이끌던 서독정부가 한번 시도했고,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⁸⁶⁾ 만약 서독이 동독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포기할 경우, 다른 서유럽의 국가들이 서독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상기

시키며 야당의 주장이 불가함을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독정부가 동·서독 교류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서독정부가 자제력을 상실하고 반발할 경우, 이것은 결국 동독의 차단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 이것은 동서독교류의 활성화라는 대동독정책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 후유증으로 결국 동·서독 주민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프랑케장관은 주장하면서 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대응 하였다. 그리고 사려 깊은 신중함과 일관성 있는 행동이 아주 중요함을 역설하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역경을 견디고 고착된 상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였다.

동시에 프랑케는 대동독정책에 관한 논쟁이 정당간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며 지나치게 비화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동독문제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감정이 쉽게 흥분하여 집단적인 거부감으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이 동·서독 관계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서독의 정치가들이 대동독정책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동독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서독정치가들의 논쟁이 동독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⁸⁷⁾

86) 1960년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것을 동독정부가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 집권당인 기민당은 대동독 경제교류의 법적 기초가 되는 베를린 조약을 취하함으로써 동독정부를 혼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는 정치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초래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는 1961년부터 1963년 사이에 동서독간의 물량이 줄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후에 서독정부는 베를린으로 자유로이 왕래하게 하는 것과 내독경제교류를 연결하는 협약을 동독정부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독이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서독주민들의 자유로운 서베를린 왕래를 방해하였지만, 아데나워가 이끄는 서독정부는 새로 체결한 협약의 해제를 또 다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듯이 실패하고 말았다. 기민당이 집권했을 당시 대동독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내독경제교류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음이 시사하듯 70년대 브란트 정부와 슈미트 정부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대동독정책과 관련하여 기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가 내독경제교류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87) Franke, Egon: 1977, Warnung vor Fehlreaktion, in: Die neue Gesellschaft 4, 24. Jahrgang, pp.280-282

(3) 대동독정책과 대동독교육 사이의 괴리

위에서 서술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이전 냉전상황에서 동독과 서독에서는 각각 자국의 체제를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예컨대 서독에서는 각종 선전매체와 세미나, 집회 그리고 언론의 사실과 칼럼 및 정치인들의 언술들을 통해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조하고 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이 60년대 말까지 아주 강조되었다.

동독에서도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언론을 통해 서독은 모든 악의 체현자, 예컨대 군국주의(Militarismus)와 파시즘(Faschismus) 그리고 제국주의(Imperialismus)의 체현자인 것처럼 주장되었으며, 서독주민들은 착취의 대상이고 서독정부는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상대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던 이런 시도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실상이 왜곡된 상태로 양쪽 주민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존재해 왔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쪽이 모든 면에서 옳고, 다른 한 쪽은 모든 면에서 틀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서독에서는 특히 반공주의가 강화되었고, 선거에서도 곧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도구화되기도 하였다. 독일이 분단된 것도 소련과 그들의 협력자인 독일공산주의자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소련과 독일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독의 정치인들이 서방세계, 특히 미국을 의지하며 분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분단의 모든 책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돌려졌다. 실제로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판단되어질 만한 구실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1950년의 한국전쟁은 서독에서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분단국 독일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서독주민들은 받아들였다. 그럴수록 반공주의는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서독은 안보위협의 해소를 위해서 미국에 더욱 의존적으로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독은 자국만이 독일민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였고, '할슈타인 독트린'을 선포하였으며 동독과 수교하는 제3국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동독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에 동독에서는 자국만이 파시즘에 저항한 전통(Anti-Faschismus)을 지켜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독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서독에 대한 동독의 우월감을 심어주려 했던 것처럼, 서독에서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서독주민들을 교화시키려 했다. 일종의 '거울영상효과' (Mirror image effect)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거울영상효과란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한쪽의 군비증강 또는 흑색선전 등이 그 반작용으로 상대방의 군비증강 또는 흑색선전을 자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1969년에 브란트 수상(사민당)이 자민당과 연합하여 집권하면서 대동독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브란트 정

부와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과 기사련은 동서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켰던 기본조약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는데, 그 때의 갈등을 종합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야당은 '접근을 통한 변화' 라는 서독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서독이 동독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독의 영향에 의하여 서독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동서독간의 교류에서 동독이 아니라 서독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을 주장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서독 주민들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동독의 사상공세에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존재라고 파악하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인 약한 존재로 생각하였다.

또한 야당은 이데올로기적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동독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동독을 서독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대립물 또는 대칭으로서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면서 전체주의 사회인 동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가운데 서독식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와 슈미트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방법보다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동독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마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아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동서독간의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분단상황을 개선하였으며 훗날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만약 야당이 주장한대로 동독을 또 하나의 독일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동서독간의 상호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럴 경우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살려내지 못하며 결국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을 생각해보면 원칙론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여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브란트·슈미트 정부가 동독에 대하여 취한 정책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70년대 대동독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였던 기민당과 기사당이 82년 자민당과 함께 정권을 잡으면서 증명해 주었다. 기민당 총재로서 82년 서독 수상이 되었던 헬무트 콜은 취임이후 비록 겉으로는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70년대 사민당의 슈미트가 수상이었을 때 추진했던 대동독정책의 주요 흐름을 변함없이 이어나갔다. 이것으로 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정책이 기본적으로 옳았음이 그것을 비판하였던 콜 수상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브란트·슈미트 정부가 동독에 대하여 취한 정책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70년대 동서독교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차단정책으로 서독정부를 계속해서 곤경에 빠트렸던 동독정부가 입증해 주었다. 동독정부는 80년대 들어서 데탕트가 와해되고 신냉전(新冷戰)이 도래되어 동서 양진영이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때 구소련의 정책에 거스르면서도 서독과의 긴장완화를 추구하면서 동서독기본조약의 정신인 평화공존을 지향하였다. 이것은 동독정부 역시 브란트·슈미트 정부가 주도하였던 70년대의 공존·공영정책이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증거이며, 이러한 동독정부의 변화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했던 서독의 대동독정책이 가져온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과연 그 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수단의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데, 70년대의 서독정부는 이런 면에서 정확한 판단의 기초 하에 정책을 수행하였다. 즉 야당이 정부의 대동독정책을 정치문제로 비화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참을성 있게 여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단기적 기대의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여 동서독관계의 발전은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면서 동독문제와 관련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려고 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동독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주민들에게 실시했던 정치교육을 통해서 동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는 측면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70년대에 신동방정책과 대동독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읽는 학교교재에도 약간의 변화가 시도되었지만,⁸⁸⁾ 이러한 변화는 70년대 초에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마부르크 그룹은 지적하였다.⁸⁹⁾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을 대립적인 정치 경제체제로 부각시키려는 태도와 동독이라는 전혀 다른 규칙과 제도에 의하여 움직이는 체제를 서독 측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시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동독에 대한 분석이란 것은 고작해야 이미 내려진 판단과 평가를 확인하고 합리화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

기되곤 하였다.⁹⁰⁾ 그 결과 옛 서독주민들은 옛 동독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 방식의 사회주의체제에서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런 식의 정치교육은 통일이 후에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동독에서의 작업장과 같은 집단체제는 공식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주민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자유로움 속에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안식처이기도 했다. 이 후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동독주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동독이 사라지고 나서였다. 동독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옛 동독체제의 이중구조와 더불어 동독주민들이 동서독 양체제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의식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일이었는데 이 부분이 취약했고, 결국 옛 서독주민들의 동독에 대한 인식은 편향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통일 전 옛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의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상호교류가 시작된 후 동베를린에 상주했던 서독대표부⁹¹⁾의 초대 대표 귄터 가우스(Gunter Gaus)가 6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한 독일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독주민들의 동독 및 동독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88)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기존의 적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독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들이 증가하였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수업에서는 학계와 언론계의 수준을 훨씬 못 따라 갔다고 말할 수 있다.

89) Freiwald, Helmut/Moldenhauer, Gebhard,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Unterrichtswerken sowie in ausgewählten Richtlinien des Faches Sozialkunde/Politik/Gemeinschaftskunde für die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p.297

90) Glaeβner, Gert-Joachim, Sozialistische Systeme, Einführung in die Kommunismus- und DDR-Forschung, 1982, Opladen

91) 서독정부는 동독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에 대사관 대신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교류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서독국민들은 동독에 대해서 그리고 동독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또한, 서독 국민들은 동독을 우리의 내면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아니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우리는 동독을 단지 경찰국가로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동독주민 개개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동독정부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⁹²⁾

한편으로는 국가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용적으로 추진했던 대동독정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었던 대동독 교육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였는데, 가우스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은 통일 후 서독출신 주민들의 의식 속에도 계속 존재해 왔고 정치통합과 사회통합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

4. 통일후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갈등

옛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서독식 정치·경제·사회체제가 동독지역에 이식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서독출신 주민들이 동독지역의 행정부에서 체제전환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서독출신 자본가들만이 동독지역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피할 수 없는 체제 전환과정의 수순을 보고 마치 서독이 동독을 식민지화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동독지역의 재건과정에서 동독출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통합과정에서 동독출신 주민들은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었고, 그들이 옛 동독체제에서 습득한 지식이라거나 업적들이 대체적으로 서독출신 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평가절하 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동독출신 주민들이 통일 후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하는 견습생으로 전락하면서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때 자존심이 짓밟힌다고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저항과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옛 동독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동독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동독출신 주민

92) 독일 일간지 Zeit(짜이트)에 실린 인터뷰내용을 요약한 것, 1981년 1월 30일, 3면, Wilhelm Bruns의 「Deutsch-deutsche Beziehungen」에서 재인용함.

들 자신인데, 자기들은 동독지역의 재건을 주도하는 과정에 거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던 반면에 서독출신들은 대거 동독지역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에 진출하여 동독주민들의 삶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동독재건과정의 모든 문제를 동독지역 주민들의 척도가 아니라 서독출신 주민들의 척도에 맞추어서 결정한 것은 동독출신 주민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⁹³⁾

그러다보니 통일 이후 동독출신들은 서독출신들이 점령군처럼 거만하게 자기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바보처럼 취급하며 무시한다고 비난해왔다. 반면에 서독출신들은 동독출신들이 지나치게 게으르고, 독일민족답지 못하다고 비난해왔다. 뿐만 아니라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까지 동독출신들을 혹평하기도 하였다.

통일 후 동독출신 주민들이 겪은 의식상의 변화를 ① 통일 직후에 겪은 감동과 흥분의 상태, ② 냉정을 되찾으며 실망을 느끼게 된 상태, ③ 서독출신 주민들에 대한 반발과 저항심이 확대되는 상태와 같이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출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아프리카 노동자에게 대신 폭행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기까지는 서독출신 주민들과 동독출신 주민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호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시키는 대신, 오히려 언론이 개개인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면서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시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폐쇄된 동독체제의 규범에 순응하며 살던 동독출신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서독출신 주민들은 이해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왔다.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나 방법도 통일이전의 서독과 동독에서는 달랐는데,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양쪽 모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삶의 수준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망만 깊어지는 상

황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동독출신 주민들이 서독출신 주민들에 대하여 느낀 부정적인 경험을 독일사회가 모든 측면에서 잘못된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즉 부분적 모습을 전체의 모습으로 비판하면서 동독출신 주민들만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예컨대 동독에서는 나찌독일에 맞서 싸워온 전통이 있는 반면, 서독은 제국주의적이고 착취적인 체제적 속성을 가졌는데, 통일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 비하여 동독출신 주민들의 전통을 더 나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자신들만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다.⁹⁴⁾

그 결과 통일 이후에 겪은 실망과 부정적인 경험이 통일 이전에 습득해 온 이데올로기적 대립양상, 즉 서로가 서로를 냉전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비난해 온 양상을 기억하고 회상시키며 과거 냉전시대에 습득했던 편견과 선입견 및 증오심과 적개심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독출신 주민들이 서독출신 주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마이어같은 사람은 통일 후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동독지역 주민들의 의식 속에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옛 동독의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시도되었던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⁹⁵⁾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옛 동독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93) 일반적으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서독출신들이 주도하고 동독출신 주민들은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결정(Fremdbestimmun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코흐가 주장하듯 동독지역 재건문제와 관련하여 동독출신 주민들의 척도를 무시한 채 서독출신 주민들의 척도에 맞추어 동독지역의 재건을 진행하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결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Koch, Thomas: 1998, Nation - zwei politische Kulturen?, in: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1998년 7/8월호 Nr. 4, p.627)

94) Benz, Wolfgang, Stereotype des Ost-West-Gegensatzes, p.4

95) Misselwitz, Hans-J., Annäherung durch Wandel, Für eine neue Sicht auf die ?innere Einheit? und die Rolle der politischen Bild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7-8/99, 1999, p.27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작업이 주로 옛 동독 체제에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들추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통시민’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옛 동독체제의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면 독재와 억압 그리고 감시, 고발 및 이데올로기적 세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옛 동독 역사의 재조명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독지역 주민들이 옛 동독의 체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에서 살던 주민들도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러다 보니 옛 동독의 역사 재조명과 결합된 정치교육은 동독지역 주민들 개개인이 통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⁹⁶⁾

즉 ‘과거청산작업’은 결국 동독출신 주민들과 서독출신 주민들의 화합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며 많은 동독출신 주민들이 통일독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반발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며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통일과 더불어 서로 다른 체제에서 40년 이상을 살아 온 동독출신 주민들과 서독출신 주민들이 하나가 되면서 정작 필요 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인데, 옛 서독식의 정치교육과 통일 후 정치교육은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이 언론에서 소개될 때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취질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경기침체와 그 속에서도 돈을 잘 버는 옛 동독 기득권층의 대조적인 모습, 그리고 신나찌를 구성하는 젊은 세대와 구세대인 옛 공산주의자 등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서독출신 주민들이 동독출신 주민들에 대하여 가진 편견을 없애지 못 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내적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셸비츠는 서독의 기득권층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측면이 있

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언론계를 장악한 서독의 기득권층이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동독지역의 보도를 외면하거나 편향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셀비츠는 민주주의 체제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치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대안을 찾아 나가는 틀을 제공해야 하는데, 통일 후 언론을 통한 정치교육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면서 논쟁문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통일이 되었어도 내적으로 분단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통일과 더불어 동독지역 주민들과 서독지역 주민들이 단지 관념적이 아닌 피부로 서로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통일 전보다 오히려 더 거리감을 갖게 되고 ‘마음의 장벽’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⁹⁷⁾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각각 40년 이상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 온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주민들이 내적통합을 이룩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1991년 12월에 독일연방정부가 정치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한 글에서 “정치교육은 동·서독 양쪽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⁹⁸⁾

즉 정치교육은 새로운 체제를, 즉 서독식 체제를 선택한 동독출신 주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하

96) 위의 글, p.28

97) Wernstedt, Rolf, Zur Lage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Einige Anmerkungen, in: Adolf H. Noll/Lutz R. Reuter (Hg.),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Geschichte, Konzeptionen, Perspektiven, Leske + Budrich, Opladen 1993, p.52

98) Misselwitz, Hans-J., Annäherung durch Wandel, Für eine neue Sicht auf die ?innere Einheit? und die Rolle der politischen Bild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7-8/99, 1999, p.25

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⁹⁹⁾ 예를 들어 1990년에 동독출신 주민들의 90%가 다원주의적 정당제도를 지지했었는데, 1995년에는 절반인 44%만이 지지할 정도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4%만이 통일독일의 민주주의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¹⁰⁰⁾ 이렇게 된 배경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5. 통일후 정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¹⁰¹⁾

통일독일의 정부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정치교육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함양시킨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옛 동독의 거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옛 서독식의 체제와 제도 그리고 규범 등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비민주적 태도로 일관했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서독주민들이 옛 동독의 모든 것들을 잘못 된 것이며 쓸모없는 것이라고 인식해 온 경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듯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동독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동독주민들은 통일 당시만 해도 새로운 사회와 질서에 적응하려 하였지만 곧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타자 중심적’인 통합과정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는데,¹⁰²⁾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결정되어지는 듯한 구조로 비쳐졌던 현상은 통일독일의 정치체제에 대한 동독출신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정치적 행위에 동독출신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점점 감소하였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증대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독일의 정치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즉 통일

99)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동서독 양쪽 지역주민들이 통일독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문화가 동독출신 주민들과 서독출신 주민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 1998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17%만이 스스로를 통일독일 즉 새로 만들어진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 느낄 뿐, 11%는 옛 동독체제가 재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65%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다.

101) 이 부분은 정상돈, ‘독일의 정치교육: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남북한 사회문화 변동과 21세기 한국인상(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0-지-1, (2001) 중 IV장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요약하여 작성하였다.

102) Misselwitz, Hans-J., Politische Bildung,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p.574

후 실시된 정치는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교육효과를 초래하였고, 정치 그 자체가 초래한 반교육적 효과와 정치교육의 목표 사이에 괴리현상이 나타났다.

서독출신 주민들이 통일 후 옛 동독체제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서독출신 주민들이 단지 옛 동독체제만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독출신 주민들이 과거에 '쓰레기' 같은 체제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 후 서독 식의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한다고 서독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동독지역 주민들로부터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온 점이다.

그러다 보니 통일 후 정치교육을 통하여 명목상으로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독출신 주민들이 동독출신 주민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정치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옛 동독체제와 그 속에서 살아 온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독출신 주민들의 자세는 통일 전의 정치교육에 의하여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즉 남한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상징처럼 알려진 옛 서독식 정치교육이 통일문제 및 동독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도록 해온 측면이 있고, 이것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동독체제가 40년 동안 존재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 독일학자들이 주장하듯 구 동독체제의 권위주의로부터 동독출신 주민들이 권위에 굴종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동독출신 주민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

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오히려 서독출신 주민들로 하여금 동독출신 주민들을 차별대우하도록 부채질하여 동독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하게 하는 것을 초래한다. 이것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정치문화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탈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990년 서독식 체제를 선택하여 통일을 이룬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동독주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이 된 이후에도 통일 전과 마찬가지로 서독측 시각으로만,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에 기초한 흑백논리 위주로 옛 동독체제와 그 속에서 살아 온 주민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해소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옛 동독사회의 이중적 측면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옛 동독사회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현재의 독일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려는 시도가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이다.¹⁰³⁾

통일 당시만 하더라도 동독출신 주민들은 서독의 많은 것이 동독의 것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일 후 동독출신 주민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동독체제에서 살아온 삶을 서독출신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만이 그들 스스

103) Dumcke, Wolfgang/Ost, Burkhard,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u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icht über eine Unterrichtseinheit in der Sekundarstufe II, in: Wendepunkte : zur deutschen Geschichte von 1945 bis heute, mit Beitr. von Wolfgang Duemcke u.a., Federführend hrsg. von Peter Massing. - Schwalbach/Ts. : Wochenschau-Verlag, 1998, p.76

로가 살아온 과정을 옳게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독출신 주민들과 구별되고 또 이들에게 대항하는 동독지역 주민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교육이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루겠다는 기본목표를 달성하려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즉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이렇듯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여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서독출신 주민들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¹⁰⁴⁾ 그리하여 통일 전과 달리 통일 후 정치교육은 동·서독 양쪽 주민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교육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치교육이 단순한 현상유지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독출신 주민들과 서독출신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복안을 개발하고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⁵⁾

6. 결론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교훈

(1) 북한교육을 통한 편견과 선입견의 형성과정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과거의 남한정부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체제부정적인 세력으로 폄하하며 견제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갈등상황과 반공교육을 체제유지용 이데올로기로 이용해왔다.¹⁰⁶⁾ 그리고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면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불온시하였다. 통일논의의 다양화를 혼란이나 사회의 불안정과 연결시키는 시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¹⁰⁷⁾ 이것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로 막으며 북한과 그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한계를 갖도록 만들기도 하였다.¹⁰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한만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그저 일인독재의 공산주의체제이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집단이라는 정도이다. 아니면 최근에는 험벗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

104) Misselwitz, Hans-J., Politische Bildung,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p.572

105) 위의 글, p.576

106) “국가적인 이념이 국민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자유로운 비판 속에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의하여 강요될 때 그러한 이념은 비판과 교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념에 대하여 금기시하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념이 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2001, pp.150-151, p.105)

107) “진보적 또는 중립적 통일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나 북한의 논리를 추종하는 것으로 오도되었다.”(박찬석,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p.69; 실제로 6·25전쟁과 그 이후에 발생한 북한의 무장전보원 침투사건들은 정부의 이런 시각을 합리화시켜 주었다.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 반공교육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에는 6·25전쟁을 일으키고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냉전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¹⁰⁹⁾

과거의 통일교육은 규범적·당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을 동포로 묘사하기는 하나, 그들의 삶과 생활방식을 이해하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경향을 띠어 왔다.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그 체제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도 오염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사람들의 생활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판단하며 우리는 제대로 사는데 북한사람들은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을 항상 잠재의식 속에서 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우영은 아래의 글에서 그 현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북한사람은 무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북한 사람들이 사는 것은 뭔가 특별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 리틀엔젤스 단원이 양증맞게 각시춤을 추면 ‘참 잘한다’가 되지만, 북한의 공연단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고 연주하면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적인 외국의 서커스단이 묘기를 부리면 감탄하지만 평양 교예단의 공연에서는 ‘강압적 훈련’을 연상하는 것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북한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 모두가 경외의 대상이 된다.”¹¹⁰⁾

때문에 이우영은 북한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규범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¹¹¹⁾ 그리고 남북한은 서로 자신들의 이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비판하고, 각자 흑백논리적 시각에서 자신들의 이념이 상대방 것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해 왔다. 예컨대 남한에서는 북한사회를 전적으로

로 부정하는 반면, 남한사회는 무조건 긍정하는 흑백논리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 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다.¹¹²⁾ 그리하여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질화되고 적대감을 재생산해왔다.

물론 반공주의가 남한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데에는 북한의 책임도 크다. 6·25전쟁의 체험과 그 이후 지속되어온 무장첩보원 침투행위는 남한사회에서 반공주의를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실시되어 온 과거의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청나게 큰 만큼 이제는 통일교육이 이데올로기 교육의 구태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북한교육이 남한사회에서 실시되다 보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래의 글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의 중학교에 편입한 한 학생이 학교생활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남한에서의 북한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도록 유도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해 일단 관심이 없구요. 만약 있다고 해도 고정된 관념이나 제가 보기에도 안 좋은 것만… 일단 불쌍하다거나 그런 걸로… ‘얼마나 못사냐?’ ‘사람고기 먹는다는데 진짜냐?’ 뭐 이런거 부정적으로만 보고… 애들은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지 않아요.

108)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편파적인 미화, 공산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관련내용에서는 주로 장점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면에 공산주의는 주로 부정적인 특성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2001, pp.125-126, p.152; 한만길,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92 북한·통일 연구논문집 (6)』, 통일원, 1992)

109)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2001, 교육과학사, p.59

110) 이우영,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정치학회 주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0, pp.12-13

111) 위의 글, p.16

112) 북한의 교육은 남한의 교육과 대칭적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남한의 주민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헐벗고 굶주림으로 어렵게 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2001, pp.205-208, p.102

애들은 북한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게 있어요. 사실 사람은 거 다 똑같잖아요. 거기 애들은 뭐 먹느냐. 뭐 하느냐 그런 황당한 질문을 막 해요.”¹¹³⁾

아래의 글도 남한에서의 북한교육이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과서에서 북한도 하나의 나라로서,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늘 비난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언어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북한은 순수 우리말만 쓰잖아요. 그런 건 좋은 건데, 한국사람들 볼 때는 그 소리가 우습잖아요. 반대로 북한사람들이 한국말 보면 웃는다구요. 남한사람들은 한국말 안 쓰고 영어 쓰면서 저렇게 좋아하냐? 뭐 그러구요.”¹¹⁴⁾

(2) 편견과 선입견으로 초래된 남남갈등

이렇게 북한과 그 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남한주민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전향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이 정책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논쟁은 사회갈등의 양상을 띠면서 증폭되었는데, 평화와 긴장완화를 추구한다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원칙 그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였으나, 각론별 추진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지자들 내에서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관련한 논쟁 및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들자면,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인식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 및 상호주의를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

미동맹관계를 둘러싸고 김대중 정부의 말기에 증폭된 반미와 친미 사이의 갈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이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협력이 그들의 체제안정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 시킴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반면에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북한은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해 왔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6·25전쟁이 남북한을 동서독과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6·25전쟁이 남긴 남북한 주민들 상호간의 적대감은 변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동서독간에 비록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베를린을 매개로 하여 동서독간의 전쟁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란트 정부와 슈미트 정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동독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교류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던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13)위의 책, p.256

114)위의 책, p.256

브란트 정부와 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을 혹독히 비판하였던 기민당과 기사당이 70년대 야당시절 대동독정책과 관련하여 내세운 원칙은 동독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지 말 것과 만약 도와준다고 할 경우 도와준 만큼 받을 것을, 다시 말해서 철저한 상호주의의 관철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거나 동독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경우 동독이 서독의 지원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였다. 동독정부가 차단정책을 구사하여 서독의 여론을 자극했을 때도 기민당과 기사당은 서독정부가 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독정부의 차단정책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서독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정치문제로 비화하여 곤경에 빠뜨리곤 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의 슈미트가 82년 수상직에서 물러나고 기민당의 콜이 수상에 취임하여 동독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1983년과 1984년에 동독정부가 서독의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있던 동독을 구원하다시피 하였던 것은,¹¹⁵⁾ 정권을 잡기 전의 기민당과 기사당이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비상호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던 기민당과 기사당도 결국은 집권 후 대동독정책을 직접 추진하였을 때 그동안 브란트 정부와 슈미트 정부가 이루어 놓은 동독과의 관계개선 효과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원칙론적인 입장에 천착하는 상호주의를 고집하지 못하고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동독에 대응하였던 것이다.

동독의 경우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에 의하여 동독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독의 지도부도 영향을 받고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하여 80년대에 신냉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가 구소련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독과의 화해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전시키려 한 의지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도 북한체제를 동독의 경우처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보다 남북한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당국자들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때문에 우선 북한당국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지난 10년간 나진·선봉과 금강산, 신의주, 개성 등의 지역이 개방되었다는 사실이며, 개방 공간에 노출된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는 김병로의 주장¹¹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배급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먹는 문제’의 해결이 국가의 손을 떠나 있고, 주민들의 삶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2년에 실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더욱 그렇다. 핵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소유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작동원리가 도입되었다.¹¹⁷⁾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교류협력증진은 북한의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심지어 박창근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 폭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초기보다 오히려 더 큰 편이라고 주장한다.¹¹⁸⁾

115)서독정부는 1983년에 동독의 은행이 서독의 은행으로부터 1억 마르크를 빌리고 1984년에 9억5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것을 보증을 서 주었다. 1983년의 1억 마르크를 물가지수 변동을 참고하여 오늘날의 圓貨로 환산하면 682억5천만원 정도가 되고, 1984년의 9억 5천만 마르크를 환산하면 약 6000억원이 된다. 비록 서독 주민들이 동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화폐를 의무적으로 동독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과 동독주민들이 서독에 여행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낮춘 것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반대급부는 동독의 경제난을 해결해 준 지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116)김병로, “비전있는 생존전략이 우선이다”, 『통일한국』, 2003년 10월호, p.22

117)남성욱, “핵위기 소용돌이에도 북한은 지금 경제개혁 중”, 『통일한국』, 2003년 8월호

118)박창근, “누가 뭐래도 북한은 지금 개혁중이다”, 『통일한국』, 2004년 1월호, p.83

동독이 서독과 교류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제 내적으로 불안정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지속하였던 것은 이것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그 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클수록 동독은 서독에 의존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네커는 심지어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게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입는 것을 자랑했을 정도이다. 엄격한 상호주의가 관찰되었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한에서 대북지원과 상호주의문제를 둘러싼 논쟁 및 갈등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깊어지기 시작한 남남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미국에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남한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사이에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후퇴시킬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하되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라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며 부각되었다.

그러다가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에 비판적인 감정이 증폭되고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반미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보수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미는 친북과 동일시되고, 또 친미는 반북과 동일시되는 등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하여 건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는 이념적

지표, 예컨대 반미와 친미 등의 이념 등을 세분화시키는데 필요하다. 세분화시켜야 각각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고, 상대에 적합한 계몽을 통하여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미감정은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표 4〉 반미감정의 유형

| 유 형 | 예 시 |
|--------------------------------|------------------------------------|
| ① 미국 행정부의 공통된 혹은 일관된 정책에 대한 반대 | 이 경우 미국은 제국주의적 국가로 표명된다. |
| ② 미국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 예컨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대 |
| ③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반대 | |
| ④ 미국시민에 대한 반감 | 남한의 경우 주한 미군에 대한 반감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

위에서 ① 과 ② 그리고 ④ 의 경우 반미감정의 대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둘째, 반공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반미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셋째,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공주의자들이고, 넷째, 반미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시민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¹¹⁹⁾

일반적으로 반미주의나 반공주의와 같이 어떤 대상을 '반대' 하는 데 치우쳐있는 경우 그들이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때문에 긍정적인 대안제시를 못하고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토론문화가 잘못 정착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토론문화가 문제인데, 반미나 반공 등 어떤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비판적인 시각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분을 전체로 생각하기 때문에¹²⁰⁾ 편견과 선입견이 더욱 심화되고 건전한 대화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게 된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대립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찬성과 반대만을 묻는 토론문화가 마스크를 통해 정착되어 자기주장과 자기방어를 넘어선 대안을 찾지 못하며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²¹⁾

친미와 반미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린다.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의 인식 틀과 잘못된 토론문화 등의 관행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반미주의(Antiamericanism)와 반공주의(Anticommunism) 등 앞에 反(Anti)이 붙는 대립적 사고방식이 사고의 경직성과 함께 극단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의 근저에는 북한문제에 대한 남한사회 내 인식의 편차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반미와 친북을 동일시하고 친

미와 반복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때문에 남남갈등의 해소를 근본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혀 나가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남북한의 장단점을 비교함에 있어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며 균형 있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북한교육이 균형 있게 진행되어 오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초래해 온 문제를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특히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요소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 개인숭배와 같이 정치체제 및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북한 사회체제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 혹시라도 1인 독재체제인 북한체제의 특성만을 오로지 부각시켜 북한주민 전체가 김일성·김정일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같은 인간으로서 생생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주민에 대한 이질성만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에서

119)이슬람권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120)예컨대 페미니즘의 경우는 남성을 여성의 적대적 존재로 묘사하며 이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121)Sommer, Gert/Becker, Johannes M./Rehbein, Klaus/Zimmermann, Rüdiger (Hg.), Feindbilder im Dienste der Aufrüstung, Beiträge aus Psychologie und anderen Humanwissenschaften, p.296

파악된 부정적인 측면이나 단점만을 들추어내려는 시도에 치우치다 보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함은 물론 상당한 이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방식을 제시할 때 우리는 ‘북한의 신발을 신고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즉 있는 그대로의 접근과 아울러 보편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접근이 요청된다.¹²²⁾

남한에서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거론할 때 많은 학자들은 한편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주민들 속에서 자기와 같은 공통점 내지 동질성을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두를 같게 만드는 추상적인 민족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서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¹²³⁾ 이런 맥락에서 옛 서독식 정치교육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서 옛 서독의 정치교육이 통일 전의 동독과 그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면서 통일 후 ‘마음의 장벽’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오히려 통일 전과 후의 독일의 정치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반사적으로 남한체제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으려는 논지는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적 동질감을 조성하기 보다는 이질감과 반목을 조장하고 적개심을 만들게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기형적이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남한체제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자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대칭으로 북한을 이용해 온 것을 정치교육과정에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현재 남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음은 물론, 통일이후에 정치통합과¹²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도 막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도 우리는 앞에서 서술된 독

일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통일 전 옛 서독이 대동독 화해협력정책은 실용적으로 추진하여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까지 이루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교육의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통일 후 '마음의 장벽'이 10여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한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북한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서술방식에 있어서 언론사마다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데, 언론권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론이 시민들의 의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일부 언론이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편파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편향적인 대북인식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던 초기의 시점에 중앙일보의 권영빈 논설위원이 방북 후 작성한 다음의 글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황석영(黃皙暎)이 북한기행에서 적고 있듯 그 곳도 사람이 살만큼의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애써 부정하고 있다. 고정관념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북을 보는 우리 시각이 편견과 아집, 체제의 우월감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

122)통일부, 『2002 통일교육기본 지침서』, 2001, p.117

123)황진숙,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통일부, 1999, p.68

124)독일통일후의 정치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정상돈, 『통일독일의 이중적 정치문화: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1999)를 참조하라.

복을 제대로 못 보거나 보지 않으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¹²⁵⁾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일견 - 논리적인 차원에서 - 타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¹²⁶⁾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지니고도 본인 스스로는 옳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고수하려는 양태도 종종 보인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이성이 아닌 감성과 무의식 세계 및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제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성되고 고착된 경로를 추적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계몽을 통하여 비이성적이거나 무의식의 세계에 토대를 둔 편견과 선입견을 의식세계로 끌어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타자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부하며 자기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규합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집단의식으로 발전하고, 집단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¹²⁷⁾ 혼자서는 자기의 존재이유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편견과 선입견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결부되어 저항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의 해소가 어려운 것인데, 집단의식과 집단이익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편견과 선입견이 구체적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편견 및 선입견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해소하려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의 구조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려면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예컨대 구조적 요인 등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의 변화가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125) 권영빈: 北에 대한 고정관념, 권영빈칼럼, 「중앙일보」, 1998.4.10

126) 그래서 주요 방송의 심야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27) Beier, Gerhard, Ost- West- Vorurteile in der Politischen Bildung, Methodisch- didaktisches Modell über die Aufarbeitung von Vorurteile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am Main, 1971, p.42

참고문헌

- 권영빈, 北에 대한 고정관념, 중앙일보, 1998. 4. 10
- 김병로, 「비전있는 생존전략이 우선이다」, 『통일한국』, 2003년 10월호
- 김성봉 외, 『중학교 도덕교육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0
- 남성욱, 「핵위기 소용돌이에도 북한은 지금 경제개혁 중」, 『통일한국』, 2003년 8월호
- 박찬석, 『남남 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 박창근, 「누가 뭐래도 북한은 지금 개혁중이다」, 『통일한국』, 2004년 1월호
- 이우영,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정치학회 주최, 2000
- 정상돈, 「통일독일의 이중적 정치문화: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7, 1999
- 정상돈, 「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8, 1999
- 정상돈, 「독일의 정치교육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남북한 사회문화 변동과 21세기 한국인상(2)』, 교육정책연구 2000-지-1, 교육인적자원부, 2001
- 통일부,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1

한만길,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 (6)』, 통일원, 1992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2001
황진숙,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샵,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통일부, 1999

- Beier, Gerhard, Ost- West-Vorurteile in der Politischen Bildung. Methodisch-didaktisches Modell über die Aufarbeitung von Vorurteile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am Main, 1971
- Benz, Wolfgang, Stereotype des Ost-West-Gegensatzes, p. 4,
- Benz, Wolfgang, Westliche Feindbilder im Kalten Krieg, in: Benz, Ute/Benz, Wolfgang (hg.) Deutschland, deine Kinder. Zur Pragung von Feindbildern in Ost und West, 2001,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Bleek, Wilhelm. Zwischendeutsche Vergleiche. Politische Probleme und politikwissenschaftliche Möglichkeiten. in: Deutschland Archiv, Nr. 7/1982
- Boßmann, Dieter (hg.). Schuler über die Einheit der Nation. Ergebnisse einer Umfrage, Frankfurt, 1978
- Braun, Volker, Langsam knirschender Morgen, 1987
- Bruns, Wilhelm, Deutsch-deutsche Beziehungen. Pramissen, Probleme, Perspektiven. 3 版, Leske Verlag + Budrich GmbH, Opladen, 1982

- Dumcke, Wolfgang. Politische Bildung und Identitätskrise, in: Adolf H. Noll/Lutz R. Reuter (hg.),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Geschichte, Konzeptionen, Perspektiven, Leske + Budrich, Opladen 1993
- Dumcke, Wolfgang/Ost, Burkhard.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u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icht über eine Unterrichtseinheit in der Sekundarstufe II, in: Wendepunkte : zur deutschen Geschichte von 1945 bis heute, mit Beitr. von Wolfgang Duemcke u.a. Federführend hrsg. von Peter Massing. - Schwalbach/Ts. : Wochenschau-Verlag, 1998
- Empirisch-methodische Arbeitsgruppe am Sozialwissenschaftlichen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Leben 95. Leben in Ostdeutschland. Daten und Feldbericht, Berlin 1995
-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 Franke, Egon: 1977, Warnung vor Fehlreaktion, in: Die neue Gesellschaft 4, 24. Jahrgang
- Freiwald, Helmut/Moldenhauer, Gebhard.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Unterrichtswerken sowie in ausgewählten Richtslinien des Faches Sozialkunde/Politik/Gemeinschaftskunde für die

-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Eckert-
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 Glaeβner, Gert-Joachim. Sozialistische Systeme. Einführung in
die Kommunismus- und DDR-Forschung, 1982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olitik und Wirtschaft der DDR
(IPW), Gesamtedaktion von Peter Klein und Stefan
Doernberg, Friedliche Koexistenz in Europa,
Berlin(Ost), 1977
- Jeismann, Karl-Ernst/Kosthorst, Erich. Deutschlandbild und
Deutsche Frage in den geschichtlichen Unterrichtswerk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Ernst
Hinrichs (hg.), Studien zur Internationalen
Schulbuchforschung. Schriftenreihe des Georg-
Eckert-Instituts, Braunschweig 1986, Georg-Eckert-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 Koch, Thomas: 1998, Nation - zwei politische Kulturen?, in: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1998년 7/8월호 Nr. 4
- Misselwitz, Hans-J.. Annäherung durch Wandel. Für eine neue
Sicht auf die ?innere Einheit? und die Rolle der
politischen Bild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7-8/99, 1999
- Misselwitz, Hans-J.. Annäherung durch Wandel. Für eine neue

- Sicht auf die 'innere Einheit' und die Rolle der politischen Bild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7-8/99, 1999
- Misselwitz, Hans-J.. Politische Bildung,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 Misselwitz, Hans-J.. Politische Bildung, in: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 Niclauß, Karlheinz: 1977, Kontroverse Deutschlandpolitik. Die politische Auseinandersetz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en Grundlagenvertrag mit der DDR,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Alfred Metzner Verlag GmbH Frankfurt am Main
- Siebert, Horst. Der andere Teil Deutschlands in Schulbüchern der DDR und der BRD, Hamburg 1970
- Sommer, Gert/Becker, Johannes M./Rehbein, Klaus/Zimmermann, Rudiger (hg.), Feindbilder im Dienste der Aufrüstung. Beiträge aus Psychologie und anderen Humanwissenschaften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Leben 97/98. Sozialreport II. Quartal 1998. Neue Bundesländer, Berlin 1998
-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Wernstedt, Rolf. Zur Lage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Einige Anmerkungen, in: Adolf H.
Noll/Lutz R. Reuter (hg.),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Geschichte, Konzeptionen,
Perspektiven, Leske + Budrich, Opladen 1993

William S. Schlamm, Zorn und Gelachter, München 1977

Zitzlaff, Dietrich. The Themenbereiche 'DDR' und 'Deutsche
Frage' in Sozialkundebüchern der Sekundarstufe I.
in: C. Lessing/K. G. Fischer (hg.), Deutsche Frage in
Geschichte, Politik und Politischer Bildung, Stuttgart,
1982

IV. 남북 통합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

1. 서론 : 분단 민족국가의 통합문제
2. 정치통합과 공동체의식
3. 남북한 공동체의식 비교 :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4. 결론 : 남북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

통일교육총서 10

갈등을 넘어 통일로

1. 서론 : 분단 민족국가의 통합문제

국민의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지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정상회담은 여야간 합의가 부재한 채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남북간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고 화해협력을 추구해가는 정책의 초석을 놓았다는 성과는 무시될 수 없다. 그 후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심화, 확대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분명 남북통합을 크게 진전시키고 있다. 남북통합의 목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통일된 민족공동체가 어떠한 질서이념에 기초해서 세워지고, 또 어떠한 운영원리에 의해 작동되게 될지는 확정할 수 없다.

남북통합은 아직은 그렇게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는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 매 단계마다 발생하는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근거한 갈등을 평화적이고 통일 우호적으로 조절·관리하는 과제를 수반한다. 그런데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갈등을 조절·관리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남남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왜냐하면 남북통합을 위한 교두보인 남북관계가 남남간의 이념 또는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동반된 남남갈등은 남한사회에 내재된 기존의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과 혼합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²⁸⁾

남남갈등은 남한사회의 기존의 갈등구도 중에서 남북관계와 연계되어서 빚어내는 갈등을 지칭한다. 남남갈등은 갈등을 허용하는 남한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고, 갈등을 배제하는 북한에서는 이를테면 북북갈등이라 이름붙일 만한 현상은 아직까지 목격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적 사회에서는 갈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마땅하게 허용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사회에서의 갈등은 완전히 제거될 수도 또 제어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생산적 갈등을 위해 조절·관리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남북통합의 주 목적은 바로 남북갈등을 조절·관리하는 것이지 남한사회의 고유한 갈등을 조절·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남남갈등이 남북관계와 연계된 갈등인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남북관계를 매개로 해서 조절·관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최대의 난제가 바로 “적대적 상호의존성”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집단이 반대 집단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¹²⁹⁾ 이는 남북갈등 및 남남갈등의 발생학적 근원이라 할 수 있고 남북통합 및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에 내재된 문제를 재고하면서 남북통합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우선, 남북통합을 논하는데 있어서 통합(integration)에 관한 이해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통합에는 기술적 및 정책적 차원과 실체적 차원이 있다. ‘실체적 통합’이란 정치공동체의 근본적인 존립근거와 운영원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게끔 하는

작용이고, '기술적 및 정책적 통합'이란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조절·관리하여 조화시키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의 양 차원은 물론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즉, 성공적인 실체적 통합은 성공적인 기술적 및 정책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통합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통합의 가장 순수한 유형은 하나의 정치공동체 내에서 전개된다. 이 경우 통합의 양 차원이 상호 공존한다. 다음으로, 통합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동체간의 정책적 통합이 있다. 이 경우 통합의 실체적 차원은 제외되어 있다. 끝으로, 통합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동체들이 정책적 통합을 기초로 해서 점차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형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유럽통합이나 분단국가의 통합이다.

유럽통합의 경우든 분단국가의 통합이든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로하는 통합은 아니다. 따라서 통합은 정책적 차원에 무게 중심이 놓여있고, 실체적 차원은 보완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실체적 통합은 자신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통합들이 반드시 완전한 실체적 통합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필연성은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책적 통합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실체적 차원에 해당되는 통합의 근거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128)배찬복,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별토론회 - 남남갈등과 남남대화』(2003. 9. 22.), pp.17-22

129)이승환, "남남갈등과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별토론회 - 남남갈등과 남남대화』(2003. 9. 22.), pp.34-35

유럽통합과 분단국가의 통합은 정책적 통합과 실체적 통합이 불일치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작용하는 통합의 근거와 분단국가에서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에서의 통합의 근거는 동일한 정치질서와 시장질서, 요컨대 동일한 헌정질서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민족적인 정책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를테면 준실체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근거이다. 이에 비해 이미 통합되었거나 통합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이다. 여기서는 이것이 바로 분단 상대국들 간의 부문별 정책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헌정질서의 통합을 모색하게 하는 근거인 것이다. 즉 남북통합에서 정책적 통합이 성사되고, 또 이것이 실체적 통합을 지향하는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는 바로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로운 변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객관적 토대와 주관적 토대가 필요하다. 객관적 토대는 제도의 존재와 기능이고, 주관적 토대는 제도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등을 포함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의 객관적 토대와 주관적 토대는 각각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으로 단순화시켜 표현될 수 있다.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공통의 공동체의식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공동체의식을 모색할 수 있을 뿐이다.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동일하다고 전제되고 있는 남과 북의 민족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남과 북의 국가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민족의식은 민족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의식이고, 국가의식은 국가의 헌법 이념 및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식이라 규정할 수 있다.

분단국가에서의 공동체의식은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분열되어 나타

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1민족 2국가체제' 로부터 유래하는 특수성이다. 즉, 남과 북의 공동체의식은 민족의 동일성에 바탕을 두는 민족의식과 상이한 헌정질서로부터 규정되는 국가의식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¹³⁰⁾ 이론적으로 고찰하면,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은 반비례적 관계이다. 민족의식이 강화되면 국가의식이 약화되고, 거꾸로 국가의식이 강화되면 민족의식이 약화된다. 남과 북 중 어느 한 측에서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괴리가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면, 예컨대 민족의식이 국가의식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어 있다면, 민족의식의 강화는 곧 국가의식의 강화를 동반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사실상 국가의식의 강화를 낳기 때문에 그 결과는 민족의식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양측은 공히 강한 민족의식을 표방하기는 한다. 그러나 각 민족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은, 차후 자세히 논증되듯이 동일하지만은 않다. 이는 민족의식이 체제의 차이에 규정받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유대 조건을 민족의식에서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남북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은 바로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과 북이 민족의식의 부각을 통해 국가의식의 차이를 잠재우는 것이 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의식에 편중된 남북관계가 과

130) 물론 분단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분리는 북한민족국가에서도 확인된다. 이 경우 국가의식이 우위를 점함으로써 상이한 민족성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갈등이 예방 내지 완화된다. 예컨대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 대신 주로 애국심 내지 애국주의가 연표되고 있다.

연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긍정적인 것인가? 남북 공동체의식은 민족의식의 동일성을 매개로해서만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가? 여기에는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민족의식은 공동체의식의 외향적 관계를, 그리고 국가의식은 공동체의식의 내향적 관계를 더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족의식은 민족들 간의 동일성과 차이를 구별하는 의식으로 나타나고, 국가의식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운영원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식의 구체적 관계는 민족의식으로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예컨대 개인 및 단체의 다원적 국가의식은 민족의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남북통합을 위해 양측이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민족의식은 동일성만이 아니라 국가의식의 차이로부터 유래하는 민족의식의 차이도 내포하고 있다. 남북이 똑같이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도 남한이 명시적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데 비해 북한이 그렇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남북 공동체의식은 민족의식의 동일성만이 아니라 국가의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족의식의 일방적인 강조가 국가의식의 작용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셋째, 민족의 통일에는 남과 북이 국가연합과 같은 구속력 있는 법적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완수된다. 이때 민족주의 내지 민족의식은 그러한 법적 공동체의 테두리를 규정하는, 즉 법적 공동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근거일 수는 있어도 법의 이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남과 북의 헌법이념의 차이와 국가의식의 차이가 부상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때 가서 풀기로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남과 북의 국가의식의 차이를 남북 공동체의식으로 융해시키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넷째, 민족의식에 편중된 남북관계가 성찰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우 현

실적인 문제이다. 자유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남한에서의 통일에 대한 연대감이 이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이 주시되어야 한다. 즉,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기존의 기대와 열망이 이제 무관심, 유보 심지어는 반대로 변하는 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는 민족의식에 편중된 통일정책이 민족의식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통일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유발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가 그만큼 진척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남과 북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남북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한 가능조건을 설정하는 일이다.

다섯째, 남과 북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은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의식의 동일성을 강화시키고 국가의식의 차이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합시키는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통합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남과 북의 공동체의식을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난후 남북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한 조건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2. 정치통합과 공동체의식

(1) 정치통합론

정치는 무릇 개인들, 단체들, 개인과 단체간의 이해갈등을 조절·관리하는 부단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통합은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갈등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적 사회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된다. 정치통합에 내재된 고유한 난제는 과연 그것이 이해갈등을 관리하는 통합으로만 성취되는가, 아니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해갈등을 관리하는 통합에서는 ‘정책’(policy)이 중시되고, 실제적인 통합은 고전적 의미의 ‘정치’(polity) 내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 강조된다.

통합의 두 차원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물론 공동체성을 전제하지 않는 이해관계만을 매개로 하는 통합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통합은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실제적 통합이 전제되어야 성공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적 통합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공동체성에 기초한 실제적 통합을 강조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통합을 주로 ‘정책적 및 기술적 통합’으로만 이해해 온 우리에게 통합에 관한 깊

이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통합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독일 헌법학자 루돌프 스멘트(R. Smend)는 통합(Integration)은 “근원적으로는 개별적인 요소들로 통일이나 전체를 재건하는 것이지만 광범위하게는 그것을 건설하거나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획득된 통일은 통일을 이루고 있던 부분들의 종합 이상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³¹⁾

즉 통합은 기존의 통일을 재건하고 갱신하는 과정, 더욱이 부분들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 과정인데, 이는 부분들을 단순히 수학적으로 종합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 있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결속시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하고, 공동체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개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현재화(대의, Repräsentation)시켜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의 근본의미를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스멘트는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법질서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에 있어서 헌법은 국가적 삶이 작용하고 현실성을 갖게 하는 삶, 생활의 법질서이다. 그는 헌법을 바로 통합과정의 법질서로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통합의 참뜻은 “공동체의 근본 의미가 헌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재화되고 체험되는 가운데 공동체성의 재건(Wiederherstellung)과 갱신(Erneuerung)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³²⁾

통합을 재건과 갱신으로 보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통합은 통합되어야 할 조건, 즉 통합된 역사를 전제하며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남북통일에도 해당된다. 통일되었던 과거 역사, 이것이 새로운 통일의 토대이다. 물론, 국가간의 지역통합에서 예견되듯이, 과거의 통합을 전제하지 않는 통합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실체적 의미의 통합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통합이 일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역사로 되어야 한다.

(2) 공동체주의

정치공동체의 통합이 공동체적 의미의 체험에 근거한다는 견해는, 통합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주의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공동체주의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근대에서는 헤겔에서 확인되듯이, 공동체를 개인들의 종합 이상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좋은 삶을 공동체의 좋은 삶과 일치시킨다.

실제적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는 비록 자유주의처럼 운동의 형태를 띠진 않지만, 개인주의화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파괴가 제기하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는 무엇보다 롤즈(J. Rawls)의 『정의론』¹³³⁾으로 대변된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논쟁의 산물이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논증한 고전적 사상가로 평가된다. 롤즈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영원한 난제를 이룬바 ‘자유 원칙’과 ‘차등의 원칙’(불평등 허용 원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자유 원칙이 평등 원칙보다 앞서 있는 것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논지로부터 정당화된다. 롤즈의 자유주의, 특히 그의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이른바 공동체주의가 옳게 비판하듯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31) Smend, R., "Integration",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Berlin: Duncker & Humblot, 1968, p.482; Smend, R.,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Berlin: Duncker & Humblot, 1968, p.170

132) Rudolf Smend, "Integration", pp.482-486. 스멘트의 통합이론을 이어받아 정치통합에서의 제도의 상징적 기능을 특별히 강조하는 정치제도론에 대해서는 Gehard Gohler, "Politische Repräsentation in der Demokratie", Politische Klasse in Deutschland, hg. von Th. Leit u. a., Bonn?Berlin: Bouvier, 1992, pp. 108-125와 "Der Zusammenhang von Institution, Macht und Repräsentation", Institution - Macht - Repräsentation. Wofür politische Institutionen stehen und wie sie wirken, hg. von G. Gohler, Baden-Baden: Nomos, 1997, pp. 11-61를 참조하시오.

133)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롤즈는 인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근본 질서를 구상한다. 사회는 정의로워야 하고, 사회제도들은 정의를 제 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세계관에 관계 없이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는 인간들의 행복 그 자체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실현 조건, 즉 동일한 기회와 가능성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런데 사회의 재화는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재화의 분배에는 어떤 필수적인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롤즈는 개별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일반적인 정의 개념을 도출시키기 위한 이론적 전제수단으로서 원초적 상태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결사를 제시한다. 원초적 상태에서는 우연성의 작용이 배제된다. 우연성은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추구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어떤 생활계획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정보부재, 즉 무지의 베일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찾게끔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도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행위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즉, 개인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지만 개인의 인생계획을 위해 사회의 근본적인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데에, 더욱이 재화가 더 많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롤즈는 이러한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 효용 극대화 원칙을 버리고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을 주장한다. 즉, 최소한의 조건에서 최대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개인들의 합의로 정립되는 정의의 원칙은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으로 구성된다. ‘자유 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자유로부터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기능을 한다. 즉,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는 근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양자는 그 출발점이 개인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는 현대 자유주의와는 달리 공동체를 개인의 무릎 아래로 굴복시키지는 않았다.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계약을 통해 정치질서를 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으로서 중시된다. 홉스가 개인주의로부터 출발하면서도 국가 절대주의에 도달한 이유, 로크가 입법부가 상설 기구로 되는 것을 경계한 이유, 칸트가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 못지않게 입법권의 행정권 침해를 반대한 이유 등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¹³⁴⁾

자유주의가 정의로운 삶을 주창하는데 비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적 좋은 삶을 옹호한다. 공동체주의는 정의로운 삶의 조건과 원칙 역시 공동체의 연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고 반

134) 근대 자유주의는 누구보다도 헤겔에 의해 심도 있게 비판되어진다. 헤겔은 근대 자유주의를 고대 폴리스 공동체주의와 종합하려는 시도를 한다. 즉 그는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동성을 시민사회로 수렴하면서도 국가를 통해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부정적 폐단을 제어하는 국가론을 펼친다.

박한다. 즉, 정의로운 삶은 공동체적 좋은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특수한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더불어 보편주의를 지향하는데 반해, 공동체주의는 보편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특수한 제도에 대한 특수한 공동체의식을 강조한다.¹³⁵⁾ 따라서 자유주의는 특수한 맥락으로부터 유출되는 애국심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비해 공동체주의에서는 애국심이 공동체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주장된다.¹³⁶⁾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기여는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에 필수적이고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공동체의식으로서 애국심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점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성의 귀중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3) 정치통합과 공동체의식

공동체주의는 애국심으로 표현되는 공동체의식의 의미와 기능을 옹계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의 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제도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공동체의 특수적 맥락을 강조하는 차원에 안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멘트의 정치통합론은 헌법이 공동체의 근본적 의미를 현재화하는 작용과 개인의 의미체험을 정치통합의 양대 요소로 파악하는 안목을 보였지만, 그러한 의미체험의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두 이론은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식인 애국심은 단지 공동체의 맥락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이 현재화하는 그 공동체의 근본적 의미, 가치, 이념, 질서원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공통

감각이고, 정치통합은 헌법의 의미 현재화와 애국심의 의미체험을 통해 재건되고 갱신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애국심(patriotism)은 말 그대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조국에는 출생과 더불어 얻게 되는 '자연적 조국'이 있고,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반성된 조국'이 있다. 조국, 특히 자연적 조국은 민족과 결부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국심의 대상이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즉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의 동일성에 맞춰져 있고 나아가 자민족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한다면, 이 경우 애국심은 민족주의(nationalism)로 규정되게 된다. 그리고 애국심이 민족이 아니라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취하더라도 타국의 이익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 경우도 애국심은 민족주의로 변질된다. 이렇게 애국심은 민족주의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애국심이 민족주의로 전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국심의 대상이 철저히 공화주의적 헌법국가에만 맞춰져야 하고 공동체의식으로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본연의 애국심은 타국의 헌법과 애국심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자민족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는 민족주의는 타국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게 된다.¹³⁷⁾

애국심의 가장 순수한 유형은 독일의 사상가 돌프 스테른베르거(D. Sternberger)에 의해 개념화된

135)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논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서로는 스테판 뮐홀·애덤 스워프트, 김해성·조영달 옮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 2001를 참조하시오.

136)공동체주의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Taylor, Ch., "Aneinander vorbei", A. Honneth(Hg.), *Kommunitarismus, Eine Debatte ue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Campus, 1993와 MacIntyre, A., "Ist Patriotismus eine Tugend?", A. Honneth(Hg.) *Kommunitarismus, Eine Debatte ue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Campus, 1993을 참조하시오. 현대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과는 달리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논하겠지만, 공동체주의적 애국심의 특징은 공동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맥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137)애국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원준호, "애국심의 대상, 요소, 현실성에 관한 숙고",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2003, pp. 49-70을 참조하시오.

‘헌법애국심’(Verfassungspatriotismus)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조국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조국의 개념은 자유로운 헌법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즉 한낱 성문헌법에서 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나라의 시민으로 속하게 하고 우리가 매일 참여하며 계속해서 형성해 가는 살아있는 헌법에서 채워진다.”¹³⁸⁾

이렇게 그는 헌법을 조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으로서의 조국을 애국심의 유일한 대상으로 취하는 ‘헌법애국심’을 제시한 것이다. 헌법애국심에는 민족을 애국심의 대상으로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로의 전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헌법애국심이 착안된 배경에는 독일 근현대사의 특수성이 있다. 즉, 전범과 분단으로 인해 독일 민족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애국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규범적으로 요청되어야 하는 정체성의 토대로 제시된 것이다. 헌법애국심에 내재된 반(反)민족주의적 견지는 그러한 배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애국심이 독일에서만 의미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애국심은 모든 자유민주적 공화국에서 공동체의식의 대표적인 모델로 옹호되고 양성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애국심은 독일통일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통일 전에 서독인의 정체성을 위한 근거로 작용했으며, 통일 후에는 전통적 민족주의와 탈 전통적 세계주의 사이에서 양극단을 중도로 수용하여 중심을 유지하는 공동체의식으로 기능하고 있다.¹³⁹⁾

독일통일은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민족주의를 통일이념으로 표방하지도 않았다. 전범의 죄의식으로 생성된 독일인들의 반(反)민족주의적 망탈리페(시대에 따른 보편적·지배적 심성)는 민족에

가치를 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독일의 통일 역시 민족적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우리의 민족의식이나 민족주의는 반(反)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져야 할 역사적 이유가 없고, 배척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되어야 할 정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우리 민족성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또 우리의 민족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절제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정당하다.

독일과 달리 우리는 민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취할 수 있고 또 그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남과 북은 각각 독자적인 정치적 조국을 갖고 있고, 북한의 조국이 남한의 조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남한의 조국은 북한의 조국이 될 수 없다. 남과 북은 민족의식을 공유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식인 애국심을 공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족의식의 동일성과 국가의식의 차이가 바로 현재 남과 북의 공동체의식이 보여주는 지형도이고, 남북통합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의식은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발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138) Sternberger, D. "Begriff des Vaterlands",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 Frankfurt a. M.: Insel, 1980, p.33

139)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 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6권 3호, 2002, pp.189-211

3. 남북한 공동체의식 비교 :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1) 반공적 민족주의 對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남과 북의 공동체의식의 뿌리로서 우선 민족주의가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족해방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시도했던 ‘저항적 민족주의’에 발생학적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과 북이 똑같이 민족의 동일성을 강조하며 민족국가 건설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를 동일한 민족주의로 일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라고 표현될 내용이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체제의 차이로부터 전적으로 규정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급의식과 결부된 북한의 민족의식은 민족주의로 묘사되기 어렵고, 북한 역시 민족주의를 공식적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

체제의 차이로부터 자유로운 민족의식을 체제의 차이에 구속적인 민족의식과 구별하기 위해 후자를 특별히 국가의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러한 민족의식의 양면성은 사실 저항적 민족주의 단계에서도 내재되었던 것이고, 남과 북에서 상이한 헌법이념에 따른 국가가 세워진 후 고착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가건설 초창기의 공동체의식을 특징화하자면, 남한의 경우 그것은 ‘반공적 민족주의’로, 그리고 북한의 경우 그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대별된다.

남한의 반공적 민족주의든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든 체제옹호를 위해 자유의 억압을 정당화한 공동체의식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남한의 반공적 민족주의는 늦어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발전적으로 지

양되는데 비해,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북한 공동체의식의 근간으로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 남한의 반공적 민족주의

정부수립 후 남한 공동체의식을 반공적 민족주의로 종합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룰테면 자유민주적 민족주의 내지 애국심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6월 민주화 항쟁까지 지속력을 발휘했던 남한의 민족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⁴⁰⁾ 첫째, 남한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면서도 건국과 더불어 반공주의와 결합되었다. 둘째, 박정희 정권이후 남한의 민족주의는 복고적·회고주의적 민족주의로 재구성되고 정책적으로 관리되었다. 셋째, 그것은 관주도의 동원형 민족주의였다. 넷째, 이러한 복고적 및 관주도의 민족주의는 한편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요구를 무마시키는 기제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근대화를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첨언하자면, 남한 민족주의는 반공주의로 채워진 공동체의식으로 출발하였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통일 친화적인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이를 정당화한 데에는 북의 위협적

140)여기서 지적되는 남한 민족주의의 특징들은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p.67-87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도발이 한 몫을 했다. 또한 남한 민족주의는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동력으로 동원되지 못했다.

만약 그 시기의 남한 민족주의에서 애국심에 해당되는 것을 구분해 낸다면, 그것은 반공적 민족주의에 포섭된 애국주의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라고 보기보다는 정치도덕적 심정으로서의 애국심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신고하면 애국, 숨겨주면 매국”이라는 표어가 그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공동체의식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참다운 애국심도 없다. 애국심은 이익을 먹고 자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유를 마시며 자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항하는 참다운 공동체의식은 자유민주적 애국심으로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헌법질서는 애국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그 대신에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애국심을 규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2)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의 실행과 더불어 북한의 공동체의식도 체제이념에 맞게 재구성된다. 이때 북한은 민족의식보다는 계급의식을 철저하게 견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공동체의식은 대표적으로 이른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표현되는 바, 이는 엄밀히 말해서 민족주의와는 무관하다. 먼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음의 인용을 통해 살펴보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이것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①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

의 조국과 향토, 사회주의 제도,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이며, ②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과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투지와 자기 희생성이며, ③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혁명적 전취물과 그것을 창조한 인민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의 감정이다.”¹⁴¹⁾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포괄적으로 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지만, 그것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조국과 제도에 대한 사랑이고,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을 이끄는 당에 대한 사랑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매진하는 인민 대중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애국, 애당, 애민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계급성, 당성, 인민성이 진정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3대 요소로 요구된다.¹⁴²⁾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애민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인민 대중”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이론은 『공산당 선언』에서 확인되듯이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표방하고 민족주의를 거부한다. 민족주의는 유산계급의 착취와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국의 사회주의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혁명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리된 후 민족의 의미가 점점 부각되었다. 여기서의 민족은 자연적 의미의 민족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미의 민족이었고,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그 자체를 수용하지는 않았다. 예컨

141)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6, p.25

142)최성욱, 같은 책, pp.29-37

대,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실제의 국제주의는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즉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 운동과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며, 레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투쟁과 이와 같은 로선을, 오직 이 한 로선만을 지지하는(선전으로써, 동정으로써 또 물질적으로) 것이다.”¹⁴³⁾

이러한 논지에 입각해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본질상 프로레타리아 애국주의이다”¹⁴⁴⁾ 라고, 또는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은 민족적 임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혁명에 기여하려는 철저한 애국주의 사상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이다”¹⁴⁵⁾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민족은 사회주의 혁명의 거점 단위라는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이것은 민족주의로 이해되거나 명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로 바뀌 표현될 수도 없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국가, 당,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서 북한 체제의 이념과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체 의식의 근간인 것이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인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간을 안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집단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혁명 이데올로기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이론적으로 봐서 레닌이 현실화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과 충돌되지도 않는다.

(2) 열린 민족주의 對 조선민족제일주의

여기서의 관심은 세계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직면하여 남과 북의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반공적 배타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화는 ‘열린 민족주의’를 모색해야 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세계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공히 체제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제시한 것이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

1) 남한의 열린 민족주의

세계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세계화는 무엇보다 금융자본의 세계화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른바 원격소통(telecommunication)의 발달로 인한 원격처리와 원격실행의 일치에서 그 가능조건을 찾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세계화는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내재적 자본논리가 낳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본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복지에 대한 약속이지만, 후자가 관찰하는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143)최성욱, 같은 책, p.19에서 재인용

144)최성욱, 같은 책, p.31

145)최성욱, 같은 책, p.19

착취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계화는 거부될 수 없는 사실로서 인지되어야 한다. 세계화에 대한 거부 역시 세계화 속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세계화가 시작된 시점을 명확히 잡아내기란 어렵지만, 그것이 사회주의권의 붕괴 전에 시작되었고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더욱 가속화 내지 확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역설을 짚어봄으로써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첫째, 세계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화이고, 무한경쟁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무한경쟁은 경쟁력이 균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쟁조건의 균등화를 강요하기에 역설적이다.

둘째, 경쟁조건의 균등화는 이른바 국가의 규제를 배제하는 자유화로 포장되는데, 이 자유화 역시 사실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탈규제 이기에 역설적이다. 여기서 세계화의 추동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인 국가의 운명이 존재한다.

셋째, 세계화는 문화 개방 및 교류를 강요하지만 상호 문화의 획일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문화의 개방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역설이 숨어있다.

세계화와 결부된 이러한,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역설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내리기는 여기서 불가능하다. 다만, 세계화는 세계화를 부정할 가능성 또한만 들어 주고 있다는 역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 세계화는 긍정적 세계화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세계화는 무엇보다 경제적 부문에서 발동된 힘이지만 경제적 현상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의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비판세력을 양성하고 있다.¹⁴⁶⁾ 조직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세계시민사회는 세계화가 경제지상주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즉 부정적 세계화의 부정

을 위한 긍정적 세계화의 교두보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지상주의적 세계화에만 참여하는 국민 국가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시민사회에만 참여하는 국민국가도 없다.

세계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제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받는다. 민족주의는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동원의 토대였고 인권과 시민권의 근거였지만,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배격주의를 보여주었다. 세계주의는 민족주의를 지양하는 대안일 수 있지만 뿌리 없는 보편주의로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편파적인 민족주의도 거부해야하지만 일방적인 세계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세계화는 분명 각 국민국가의 공동체의식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 민족주의를 고집하는가 하면 탈전통적 세계주의를 추종한다. 그러나 세계화가 양면성을 함축하고 있는 한 그와 관련된 공동체의식 역시 어느 한쪽에만 영혼을 맡길 수 없다. 여기서 민족주의의 폐쇄성과 세계주의의 개방성의 일방적 정도를 경계하며 양자를 아우르는 과제가 바로 열린 민족주의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열린 민족주의는 사실 이를테면 닫힌 세계주의라는 용어만큼이나 형용모순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열린 민족주의는 세계화 속에서 각국이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이고 상호 마땅히 요구되어야 할 규범이기도 하다.

146)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든스를 참조할 수 있다: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pp.193-224

열린 민족주의는 대립하는 것들이 상호 공존하며 조화를 모색해야함을 지시하고 있다.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의식과 세계의식을 조화시켜야 하고, 문화간의 상호 교류와 침투에는 개방성을 보이면서도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열린 민족주의는 국가이익의 배타적 관철과 국가이익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극단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국가주권의 대외 의존성과 독립성 사이에서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화를 도전이자 기회로 인지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우리의 공동체의식을 이루는 한 지분으로 양성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것은 대립적인 양면의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의식이다. 즉, 그것은 객관적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면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다분하고 지속적인 관점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의식인 것이다.

남한의 열린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 열린 민족주의가 세계화에 대한 열림을 추구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열림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남한의 열린 민족주의는 분명 북한의 조선 민족제일주의와 대별되는 의식이지만 그것과의 관계를 대상화한 의식은 아니다. 남북 공동체의식을 위해서는 세계화에 대한 개방만큼이나 북한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북한은 세계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체제 위협적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표방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계급성, 당성, 인민성을 3대 요소로 삼은 반면, 조선민족제일주

의는 민족의 동질성을 구성하는 민족성과 민족의 우수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자연적 의식을 버팀목 삼아 흔들릴지도 모르는 정치적 의식을 지탱시키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분명 민족의 자연적 존재성과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의 중심축은 변함없이 계급의식이 규정하는 국가의식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다음의 인용을 통해 북한의 민족 개념을 살펴보자.

“민족이란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다. 그러나 민족은 계급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과는 달리 피줄,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된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다.”¹⁴⁷⁾

이 언명은 계급의 실체와 구별된 민족의 실체를 상정하고 있고 피줄, 언어, 지역, 문화를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계급성을 초월한 유대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유대감을 보장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민족을 이루는 기본 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¹⁴⁸⁾ 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민족성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은 계급의식 및 국가의식으로

147)리영, 『조선을 빛내이자』, 금성 청년출판사, 1991, p.6

148)리영, 같은 책, p.8에서 재인용

부터 이완된 민족의식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는 한다. 그러나 북한이 계급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족의식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난 후 내려져야 한다.

민족 개념의 강화와 더불어 북한이 조국 개념에서도 자연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표현한 “글밭”(나무에 새긴 구호)을 소개하는 한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들이 실려 있다: “조국은 생명이다”, “조국 어머니 품”, “조국이여 내 너를 위해 한목숨 바치는 충신이 되리라”, “나라가 없으면 살아도 죽은 몸 목숨 바쳐 내 나라 다시 찾자”, “어머니조국이여 내 그대 위해 한목숨 아낌없이 바치는 충신이 되리라” 등등.¹⁴⁹⁾ 이 구호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자연적 내지 생물학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서의 조국이 계급적 성격을 중시한 점과 대비된다. 조국이라는 말에 어머니를 붙여 만들어진 “어머니조국”이라는 형용모순은 조국이 거부될 수 없는 운명적 관계라는 사실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책자는 그 구호들이 항일투쟁시대부터 쓰여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 김일성의 언급을 소개하기도 한다. 북한이 조국의 자연적 성격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호들을 모아 책자로 내며 조국을 생명의 근거로 재각인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유발한 위기의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조선민족제일주의란 무엇인가?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휘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¹⁵⁰⁾ 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란 거창한 개념이 표현하는 것은 사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감으로 간단하게 요약된다.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

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¹⁵¹⁾ 라는 김정일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우월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대항하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주의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의거해서 “세계주의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매개 사람들의 조국은 전세계이며 세계의 모든 것은 ‘월등민족’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는 극악한 부르조아 침략사상이다”¹⁵²⁾ 라고 단죄하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넘겨다보면서 머리를 기웃거리면 그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과는 인연이 없다”¹⁵³⁾ 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독자노선을 옹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세계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응하여 개념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는 특수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비록 민족의 우월성이 아니라 우수성에 대한 긍지를 찬미하고, 또 각 민족이 지닌 우수성을 상호 인정하는 대등한 관계를 표방하기는 한다. 그러나 민족의 우수성은 민족간의 교류와 비교를 통해서 타자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자기만의 주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표방하는 민족관계에서는 각 민족이 그 무엇을 우수성

149)김룡덕·김경섭, 『불멸의 글밭 4 애국주의 정신』, 금성청년출판사, 1991, p.3-21

150)리영, 『조선을 빛내이자』, 금성청년출판사, 1991, p.61에서 재인용

151)리영, 같은 책, p.66에서 재인용

152)리영, 같은 책, p.70

153)리영, 같은 책, p.139

으로 주장하든지 간에 그대로 정당화된다. 특수주의는 또 다른 특수주의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철학적 빈곤이 있다. 그리고 유기체는 그 어떤 미세한 것이라도 환경과 교류를 통해서만 자신의 유기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기체는 개방성을 통해서만 자신을 유지시키는 폐쇄성이 보존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같은 방식은 세계주의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되지 못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엄정히 준별해야 할 것은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관계이다. 먼저 다음의 인용을 읽어보자.

“민족의 위대성이 민족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때 그 지도사상이 어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민족안에는 사상과 신앙, 정견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족의 위대성을 규정하는데 작용하는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민족 전체의 지향과 요구, 리해관계를 가장 철저히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철저한 자주사상이기 때문이다.”¹⁵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계급의식으로부터 이탈된 민족의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이고, 이 점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연장인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민족 개념이 제시하는 민족의 구성요소는 ‘조선민족’과 ‘한민족’이 능히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결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이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내세우는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를 공유할 여지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3) 다원주의 對 수령절대주의

남과 북의 공동체의식을 분석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우리는 남한의 다원주의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를 대비시킬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공동체의식은 민주화를 진척하면서 '다원주의적 애국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원주의적 애국심은 남한 공동체의식의 내향적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이고, 이는 민족주의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다원주의적 애국심에는 민주화이후 활성화된 개인주의 및 다원적 집단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공동체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남북통합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공동체의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북한의 공동체의식에서 남한의 다원주의적 애국심과 비교되는 요소는 이른바 '수령절대주의'이다. 수령절대주의는 다양한 애국적 태도 및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 공동체의식의 일원주의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 공동체의식의 전개를 시기별로 나눌 때 수령절대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수령절대주의는 궁극적으로 북한 공동체의식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54리영, 같은 책, p.46

1) 남한의 다원주의적 애국심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해방 후의 독재체제는 파행적인 법률과 권리 문화를 양산했다. 그러한 법률은 권리의 실현근거일 수 없었다. 일제하의 민족주의가 타민족에 의한 지배질서를 거부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타민족에 의한 지배질서가 강압적이지 아니었더라도 그것은 타민족의 지배질서라는 이유만으로도 거부될 근거가 충분하다. 그런데 자기민족의 지배라고 해서 그 지배질서가 곧바로 애국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적 지배질서의 강압적인 법률 아래에서 시민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고, 따라서 법률에 대한 그 어떠한 긍지도 가질 수 없었으며,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도 기대될 수 없었다. 법률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참다운 애국심이 형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요된 덕은 비록 그 강제성을 전도시키는 시련의 도야 과정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덕일 수 없다.

우리의 비민주적인 독재시대에서 참다운 애국심은 필시 민주주의 운동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반공주의적 민족주의의 내지 애국주의는 민주화가 되기까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에서만 그 유의미성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지배질서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또 이것을 통일을 위한 전제로 설정함으로써 반공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민족주의의 내지 애국주의를 지양하고 민주적 헌법질서와 민족통일을 희구하는 애국심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촉발된 일련의 민주화 과정이후에야 비로소 본연의 의미에 맞는 애국심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

을 것이다. 민주화와 함께 우리의 헌법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낯설거나 강압적인 지배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로 인지될 수 있게 되었고, 사랑과 긍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남한의 민족주의는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반공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보여줬던 통일에 비우호적인 민족의식은 민주화와 더불어 점점 통일에 우호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민족의식은 이른바 ‘햇볕정책’을 통해 일정한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한국에서의 통일 우호적인 민족의식은 민주적인 국가의식과 함께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민주주의 운동이 그렇게 헌법질서를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공히 자유민주주의로 갱신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도 가져왔지만, 유감스럽게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워 합당하게 현존하는 헌법질서를 항상 무력화시키려는 부정적인 경향도 양산했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이 애국심은 아니지만 질서를 비판하는 수위를 넘어서는 것 또한 애국적이질 않다. 어떤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순응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하는지는 애국심의 도덕적 수준이 가름할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의 발달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정당하고, 국가는 무엇보다 이를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또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개별적 이익을 단체이익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수용하고 촉진한다. 개별이익의 단체이익으로의 전환은 집단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단체이익은 개별이익이 국가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여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체로 조직화된 개별이익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다원화된 집단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의식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원주의(pluralism)는 일원주의적 세계관, 가치관, 질서관에 대항하는 총체적인 흐름이다. 다원주의 자체가 다원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철학적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등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중심으로 다원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합문화주의에도 공동체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맞서있다.

공동체주의적 복합문화주의는 특수한 집단적 문화의 권리 역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소속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테일러(Ch. Taylor)의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보편주의적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차이맹적일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그는 최종적으로 서구문화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 자유주의 역시 보편주의의 탈을 쓴 특수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복합문화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하에서는 복합문화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지만, 자유주의 사상가인 라츠(J. Raz)는 어떤 특수한 집단이 소속 개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증진하는 한에 있어서 복합문화주의는 적극 옹호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한 집단적 문화로부터 탈출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요컨대, 복합문화주의라는 명분 하에 그 문화집단에 현존하는 억압의 구조가 덩달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지이다. 하버마스(J. Habermas) 역시 자유주의의 관점에서의 복합문화주의를 역설한다. 그는 공동체주의적 복합문화주의는 문화간의 삼투작용을 사전에 중단시킬 위험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주의적 복합문화주의는 이 원칙의 법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다원주의는 집단들의 이익표출이 정당하게 허용되고, 이를 통해 집단들 역시 의사 및 정책결정의 참여자로 인정받는 체계를 의미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국가가 주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행사하는 체계와 대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주권의 약화를 동반한다. 그렇지만, 초기의 래스키(H. Laski)가 의도한 것처럼 정치적 다원주의가 반드시 반(反)주권적일 이유는 없다.

래스키는 기르케(O. von Gierke)에 의한 중세 독일의 조합법에 관한 연구, 제임스(W. James)의 다원주의 철학, 또 당시 영국 노동운동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국가와 단체와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안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다원주의는 반주권적 경향을 옹호하는 견지를 담고 있다. 이어서 프뢰켈(E. Frenkel)은 다원주의의 반

주권성을 제한적으로만 옹호하게 된다. 즉, 그는 다원주의가 반주권적이어도 되는 경우는 그것이 전체주의에 대항할 때만 정당하다고 본다. 그에 있어서의 다원주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간이고, 공공선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단체의 이익표출 및 권리주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치 내지 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가치관이 생성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다원주의가 개인적 및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개되고 있고, 또한 가치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옹호가 상호 비판과 교류를 차단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경향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다원주의는 반드시 공동체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를 다원주의적 애국심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다원주의적 애국심은 우선 다원적 이익표출과 가치옹호를 인정하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그것은 자신의 이익표출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상호 비판과 교류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자신의 가치관, 생활방식, 문화만을 고집하는 행태를 지양하는 의식이어야 한다. 요컨대, 다원주의적 애국심은 다원적 단체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공이익을 지향해야 하고, 다원적 가치와 문화의 차이를 옹호하는 가운데 이를 공동화하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가치 및 문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애국심은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공동체의식이다. 이것만이 다원주의가 불가피하게 배태시키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2) 북한의 일원주의적 애국주의(수령절대주의)

북한의 일원주의적 애국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주체사상의 유일성이 요구하는 공동체의식이다. 우리는 이를 남한의 다원주의적 애국심과 대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원주의로 묘사하기로 한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일원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사이에서 특징화되는 공동체의식이다. 이는 1986년 김정일의 교시에 의해 대두된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통해 '김일성주의'로 변질된다. 이 과정이 낳은 '수령론'은 1980년대 김정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보완된 것이다. 이어서 주체사상은 1990년대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근거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전개된다.¹⁵⁵⁾

일원주의적 애국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해야 한다. 우선, 사회정치적 생명체 논리이다. 이는 김정일이 기존의 수령관을 강화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그 골자는 사람의 유기체성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유기체가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뇌수가 생명을 유지하고 관장하듯이, 사회의 유기체 역시 인민 개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수령이 그 사회적 생명의

155) 김용재,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구조",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4, pp.22-23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¹⁵⁶⁾

둘째, 집단주의 원칙이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생활의 원칙으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¹⁵⁷⁾ 이 집단주의 원칙이 견지하는 것은 “개인의 리익보다 인민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¹⁵⁸⁾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실상 전체가 하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가 전체를 위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유교적 충효사상이다. 김정일은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사람이 참다운 충신이며 효자”¹⁵⁹⁾ 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당과 수령에 대한 희생을 충신과 효자의 생활원리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집단주의 원칙, 유교적 충효사상이 고무하는 것은 곧 일원주의적 애국주의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국가를 이끄는 당과 수령의 권리와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은 결국 수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귀결되는 ‘수령절대주의’인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유일체제를 추구하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의 일원주의적 애국주의는 보왕(保王)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애국주의는 사실상 제도를 대상으로 취하기보다는 수령에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과 대안의 모색을 허용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만을 강요하는 애국주의인 것이다.

4. 결론 : 남북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

일반적으로 조직 및 제도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또 의식의 변화는 조직과 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식과 제도의 복합성은 분단국가의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단국가에서의 의식과 제도의 변화는 4중 구조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현존하는 조직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현존하게 될 조직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변화는 확정적으로 예견될 수 없고, 단지 미완으로만 진행된다.

남과 북의 의식 변화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통일된 남북 공동체의식을 논할 수 없고, 단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공동체의식을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남북 공동체의식의 지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과 북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준별하면서 그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156)김석항,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04, pp.241-242

157)김석항,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04, p.243

158)리영, 『조선을 빛내이자』, 금성 청년출판사, 1991, p.150

159)리영, 같은 책, p.140에서 재인용

(1) 민족의식의 동일성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야 할 당위성과 현실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즉, 통일의 당위적 근거는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 동일한 역사를 체험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의 현실적 근거는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데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공히 뒤늦은 민족국가 건설과 평화번영을 위해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민족의식은 과연 민족의 동일성만큼이나 동일한가? 이미 앞 절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남과 북은 같은 민족성을 나누고 있지만 분단을 거치면서 약간은 이질화되기도 했고, 민족의식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민족의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에 근거하는 민족의식이고, 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의식으로서 남한의 자유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의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과 북의 민족의식이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로 통일된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의식은 남과 북의 민족의식이 공유하는 동일성이다.

요컨대, 남과 북의 민족의식은 체제의 차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과 체제의 차이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물론 전자의 체제규정적인 민족의식 부분보다 후자의 체제자유적인 민족의식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체제규정적인 민족의식은 이질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묵인되어야 하고, 동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제자유적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우회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적 민족의식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항해서 명시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족의식을 맞세우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북한의 그러한 체제규정

적인 민족의식에 대해서 체제자유적인 민족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이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민족의식에 대한 비판적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의 민족의식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기는 해도 자주성을 견지하는 긍정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민족의식이 개방적이기는 해도 다소 외세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남한은 교류와 지원을 통해 체제의 차이를 떠나 우호 협력하는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한편, 북한 민족의식에서의 자주성을 수용하여 이를 남한 민족의식에서의 개방성과 조화시키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다. 이 역시 개방적 민족의식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¹⁶⁰⁾

우리는 북한이 남한에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거나 남한이 변하는 만큼 북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준비해 주는 세심한 배려를 선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장래 남북이 공유하게 될 민족의식을 구성해 나가야 하고,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은 우선 그러한 민족의식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지만 남북 공동체의식은 단지 민족의식의 동일성에만 바탕을 둘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민족의식에는 바로 국가의식의 차이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은폐되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민족의식은 민족국가 또

160) 박호성은 남과 북의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북한 민족주의는 '수령관'이나 당에 대한 충성 등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구성원의 내적 자율성 확립에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고 있다. 반면에 남한 민족주의는 민족구성원 상호간의 동질성 확보에 대단히 등한한 편이다. 다른 한편 민족통일 및 민족자주 지향성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한의 그것에 비해 월등한 진취성을 과시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남과 북의 민족주의가 서로의 결함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치료함으로써 '한반도 민족주의'로 결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의 비교연구』, 당대, 1997, p.153

는 다른 형태의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헌법의 이념이나 질서의 원리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국가의식의 차이 인정과 포용

일반적으로 민족성의 배타적 우월성이나 국가이익의 배타적 관철을 지향하지 않는 애국심은 타국의 애국심, 즉 타국의 구성원이 자국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내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체제이념의 대립을 동반하는 분단국가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즉 한 분단국에서 마땅히 요구되어야 할 본연의 애국심이 상대 분단국에 대한 배타성을 갖는 것은 분단국가의 애국심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이다. 남북의 경우를 놓고 말하자면, 북한주민이 북한의 헌법이념과 질서에 긍지를 갖고 사랑하는 것이나 남한주민이 남한의 헌법이념과 질서에 긍지를 갖고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남과 북의 애국심은 각각 상대방의 헌법이념과 질서에 대한 적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성의 근원은 남과 북이 각각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관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서서도 확인되었듯이, 남북 공동체의식은 우선적으로 민족적 동일성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지만, 민족적 동일성만이 남북 공동체의식을 규정해서도 안 된다. 남북 공동체의식은 적대성을 내포하는 남과 북의 국가의식이 상호 발전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남북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이 상대방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 주민의 애국심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의 인정은 남과 북이 위협적 관계를 협력

적 관계로 재구성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의 인정은 남과 북의 분단을 고착시키는 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남북 통일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자는 남과 북이 위협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구성하는 데에 만족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가 부정될 근거는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남북 공동체의식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넘어서는 차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이 상대방의 헌법이념과 질서 그리고 상대방의 국가 의식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쌍방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애국심은 민족통일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상대방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설사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호 인정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긍정성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포용적 애국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듯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애국심은 남북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근간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헌법이념과 질서의 우수성은 타자 배타적인 자기주장으로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수성을 인정해줄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호 인정 속에서만 객관적으로 우수한 것은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타자의 긍

정성을 수용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데 있어서 북한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한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른바 '민족해방'의 대상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일원주의적 애국심은 도대체 이질적인 타자를 인정할 수 없고 이질적인 요소를 수용할 수도 없다. 이에 비해 남한은 북한의 헌법이념과 질서를 능히 인정하고 나아가 그것이 소유한 긍정적인 요소를 수용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 남한이 다원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자유민주적 헌법이념과 질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원주의적 애국심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3) 참여와 책임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공동체의식은 민족적 동일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민족의식으로만 채워져서도 안 되고, 또 헌법적 이념과 질서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고수하는 국가의식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양자간의 적절한 균형을 요구한다.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은 남북통합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지만, 통합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혼재되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의 과정에서는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균형을 관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나아가 양자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 남북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이다.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객관적 토대는 남북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남북 공동체의식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체의식은 남북관계의 전개에 영향을 주고, 또 남북관계는

남북 공동체의식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남북 공동체의식의 주관적 토대는 남북 구성원들의 통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서 찾아져야 한다. 남북 통합을 향한 당위성과 현실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남북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공동체의식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호 침투되어 균형을 이뤄가면서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확대시키고 있는 바, 무엇보다 그것이 각 부문별로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은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일종의 학습과정으로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간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쌍방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장점을 수용하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자연적 동일성보다 고차원적인 동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상호간의 공동성을 구속력 있게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확보되는 공동성은 쌍방의 이

넘적 차이를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동족간의 관계이면서도 이익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더 나아가 보다 큰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 단계 남북관계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불균형적이다. 이른바 ‘피주기 식’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은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다. 대북지원은 결국 국민의 재산을 쓰는 것이기에 그것은 납세자 주권옹호라는 차원에서 합의되어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인도적 지원과 대가를 요구해야 하는 비인도적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⁶¹⁾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의 결여, 북한의 불변, 그리고 단기적 이익 환수에 연연하는 태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즉 정책 자체가 방해받지 않는 한 대북 지원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야 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시작하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지원을 놓고 괄목할 만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나 환수되지 않는 투자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쉽게 간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변화되기까지 그리고 상호이익을 교환하고 나아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 ‘매몰비용’ (sunk cost)에 집착해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일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관계가 밀착되면 될수록 쌍방은 각각의 경제적 원리 그리고 갈등이나 분쟁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서로 학습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학습효과는 발전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민중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로 합의(2003. 10.12)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척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현 단계의 남북관계의 성격상 남과 북의 위원회가

상위 차원의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또 이 위원회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법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독자성은 무엇보다 위원회의 결정이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해 재심될 수 없다는 조항에서 확인된다.¹⁶²⁾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남북관계가 부문별로, 적어도 독자성을 표방하는 공동의 기구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설사 그러한 위원회가 구속력과 권한에 있어서는 아직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남과 북이 부문별로 공동의 관심을 놓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쟁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은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간의 차이에 대해 더 많은 이해심을 갖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긍정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서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듯이,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다.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고, 또 성공적인 남북 공동체의식은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61)배찬복,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특별 토론회 - 남남갈등과 남남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3. 9. 22), p.24

162)통일부, 『남북대화』, 제 69호, 2003, pp.322-330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남북 공동체의식의 동향을 주시하고, 특히 남한에서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적합하게 조화된 공동체의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서 국민의 관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장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의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책무(accountability)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 있는 안목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관여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국민의 관여와 참여를 조직화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정부를 포함하여 합의에 참여하는 저마다의 주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공생하는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¹⁶³⁾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시행된 것은 분명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되었고, 이는 물론 비판과 참여를 수용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한다.¹⁶⁴⁾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은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내부 협상 내지 합의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민간단체가 정부의 정책결정에만 참여해야 할지, 아니면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도 참여해야 하는지는 쉽게 규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견지되어야 할 것은 민간단체가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에 입각해서 정부를 위임된 대리인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는 국민적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발생할 수도 있는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간의 대화와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수

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베버(M. Weber)는 행위자가 자기가 소유한 신념 내지 심정의 고수에만 만족하고 자기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 '신념윤리 내지 심정윤리'(Gesinnungsethik)에 자기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대비시킨 바 있다.¹⁶⁵⁾

남북관계와 남북 공동체의식을 진전시켜야 할 주체들 모두는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각자의 주의·주장에만 충실하려는 신념윤리를 지양하고, 남과 북의 민족의식의 동일성과 국가의식의 차이를 발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각자의 행위가 낳을 결과를 고려하는 책임윤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63)이승환, "남남갈등과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별 토론회 - 남남갈등과 남남대화』(2003. 9. 22), p.43

164)배찬복,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별 토론회 - 남남갈등과 남남대화』(2003. 9. 22), p.12-13

165)막스 베버, 이상률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문예출판사, 1999, p.137

참고문헌

- 김룡덕·김경섭, 『불멸의 글밭 4: 애국주의 정신』, 금성청년출판사
1991
- 김석향,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 김용재,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구조」,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
육원, 2004
- 리영, 『조선을 빛내이자』, 금성청년출판사, 1991
- 막스 베버, 이상률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울: 도서출판 당대, 1997
- 배찬복,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특별토론회-남남갈등과 남
남대화』,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2003
- 스테판 물홀·애덤 스유프트 지음, 김해성·조영달 옮김, 『자유주의
와 공동체주의』,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 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한국의대의국학종합연구센터, 6권 3호, 2002
- 원준호, 「애국심의 대상, 요소, 현실성에 관한 숙고」, 『한국정치학회
보』, 37집 3호, 2003
- 이승환, 「남남갈등과 민간단체의 역할」, 200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 『특별토론회 - 남남갈등과 남남대화』, 2003. 9. 22.

- 정봉화, 『대결에서 공존으로』,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2
-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1985
-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6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편저, 『남·북한 헌법의 이해』, 서울: 삼광출판사, 2002
- 통일부. 『남북대화』, 제 69호, 2003

- Gebhardt, Jurgen. 1993. "Verfassungspatriotismus als Identitätskonzept der Natio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d 14. 2. April 1993. 29-37.
- Gohler, Gerhard. 1992. "Politische Representation in der Demokratie", in Politische Klasse in Deutschland, hg. von Th. Leit u. a., Bonn?Berlin: Bouvier.
- Gohler, Gerhard. 1997. "Der Zusammenhang von Institution, Macht und Repräsentation", in Institution - Macht - Repräsentation. Wofur politische Institutionen stehen und wie sie wirken, hg. von G. Gohler, Baden-Baden: Nomos.
- Habermas, Jurgen. 1987. "Apologetische Tendenzen". Eine Art Schadenabwicklung. 120-136.
- Habermas, Jurgen. 1987. "Geschichtsbewusstsein und postnationale Identität". Eine Art Schadenabwicklung. 161-179.
- Habermas, Jurgen. 1990. "Grenzen des Neohistorismus", Die

-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 M.: Suhrkamp. 149-156.
- Habermas, Jurgen. 1990. "Die Stunden der nationalen Empfindung. Republikanische Gesinnung oder Nationalbewusstsein?". Die nachholende Revolution.
- Kluxen-Pyta, Donate. 1990. "Verfassungspatriotismus und nationale Identität". Zeitschrift für Politik. Jg. 37. H. 2.
- MacIntyre, Alasdair. 1993. "Ist Patriotismus eine Tugend?" (Is Patriotism a Virtue?). in A. Honneth(Hg.) Kommunitarismus. Eine Debatte ü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Campus
- Reese-Schafer, W.. 1991. "Universalismus, negativer Nationalismus und die neue Einheit der Deutschen". Universalismus, Nationalismus und die neue Einheit der Deutschen. hg. von P. Braitling u. W. Reese-Schafer. Frankfurt a. M.: Fischer.
- Smend, Rudolf. 1968.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in R. Smend,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Berlin: Duncker & Humblot.
- Smend, Rudolf. 1968. "Integration", in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 Sternberger, Dolf. 1947. "Begriff des Vaterlands".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 Frankfurt a. M.: Insel. 1980.
- Sternberger, Dolf. 1979. "Verfassungspatriotismus".

-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 Sternberger, Dolf. 1982. "Verfassungspatriotismus. Rede bei der 25-Jahr-Feier der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 Sternberger, Dolf. 1987. "Anmerkungen beim Colloquium über Patriotismus in Heidelberg am 6. November 1987".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 Taylor, Charles. 1993. "Aneinander vorbei" (Cross-Purposes: The Liberal -Communitarian Debate). in A. Honneth(Hg.) Kommunitarismus. Eine Debatte ü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Campus

통일교육 총서

- ① 오기성 외, 「통일교육교수법과 그 실제」(2002. 2) [CD 별도 제작]
- ② 함인희 외,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2002. 6)
- ③ 정현백 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2002. 10)
- ④ 김혜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의 갈등과 사회통합」(2002. 12)
- ⑤ 윤웅상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2003. 3)
- ⑥ 오승렬 외,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2003. 6)
- ⑦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2003. 12)
- ⑧ 이일영,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2004.5)
- ⑨ 김근식 외, 「통일·남북관계 사전」(2004.7)

갈등을 넘어 통일로: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인쇄일 / 2004년 9월 4일

발행일 / 2004년 9월 6일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0~5 팩스 02)901-7088

편집·인쇄 / 조원인쇄 02) 2263-3792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